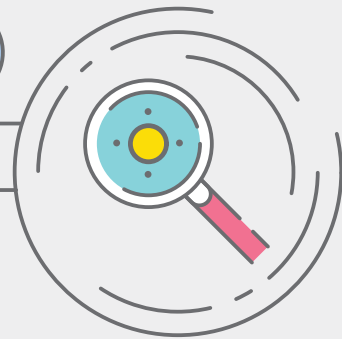


2018 함께하는 충북 민·관 합동 정책포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충북 혁신정책 한마당



일시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주제 충북의 혁신 정책 개발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

분야 충북의 미래 비전을 위한 8개 분야

공공
혁신

농업

물

복지

아동·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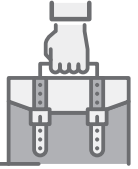
여성

체육

평생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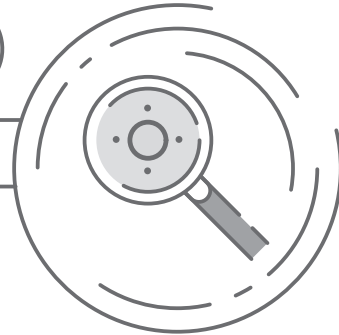
주최 충청북도,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주관 함께하는 충북 정책포럼, (사)충북시민재단



2018 함께하는 충북 민·관 합동 정책포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충북 혁신정책 한마당



일시 2018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주제 충북의 혁신 정책 개발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

분야 충북의 미래 비전을 위한 8개 분야

공공
혁신

농업

물

복지

아동·
청소년

여성

체육

평생
교육

주최 충청북도,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주관 함께하는 충북 정책포럼, (사)충북시민재단

◆ 진행일정 ◆

□ 1부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진 행 : 송재봉 (사)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14:00 ~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 ~ 14:10	5'	개회사	남기헌 도정정책자문단 위원장
14:10 ~ 14:20	10'	축사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14:20 ~ 14:25	5'	축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14:20 ~ 14:30	10'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일정 설명	충청북도

□ 2부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4:30 ~ 15:00	30'	주제발표	공공혁신 /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농 업 / 김남운 전농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물 / 맹승진 충북물포럼 사무처장
			복 지 / 김관성 충청북도노인복지관 부관장
15:00 ~ 15:10	10'	휴식	
15:10 ~ 15:40	30'	주제발표	아동·청소년 / 이창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부원장
			여 성 / 이해정 청주YWCA 사무총장
			체 육 / 김현주 (사)충북체육포럼 사무국장
			평생교육 / 허정무 충북평생교육포럼 대표
15:40 ~ 16:10	30'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
사회 :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16:10 ~ 17:10	60'	공유와 화합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 결과 발표
17:10 ~ 17:30	20'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
- ❖ 〈공공혁신〉 도민이 도정의 주체로 체감할 수 있는 충북 / 01
: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 ❖ 〈농업〉 농민수당 도입과 충북농정협치기구 설치 / 11
: 김남운 (전농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
 - ❖ 〈물〉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구성 방안 / 21
: 맹승진 (충북물포럼 사무처장)
 -
 - ❖ 〈복지〉 고령화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VR개발 / 29
: 김관성 (충청북도노인복지관 부관장)
 -
 - ❖ 〈이동·청소년〉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이동·청소년 자원정책 구축 / 37
: 이창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부원장)
 -
 - ❖ 〈여성〉 충청북도 여성 친화형 일자리 정책 / 47
: 이해정 (청주YWCA 사무총장)
 -
 - ❖ 〈체육〉 충청북도스포츠역사관 건립 / 57
: 김현주 ((사)충북체육포럼 사무국장)
 -
 - ❖ 〈평생교육〉 모든 세대가 더불어 성장하는 충북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63
: 허정무 (충북평생교육포럼 대표)
-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I 정책안 도출 과정

1 참여주체

- 기초 제안의제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정책연구센터 위원을 중심으로 회원토론회 개최
- 제안된 5대 과제중 주요 과제 선정 및 논의를 위한 충북민관정책포럼 의제 발굴 및 제안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

2 논의 과정

- 회원 대토론회 / 민선 7기 공공혁신 및 민관협치 등 정책제안 기본 과제 선정을 위한 기초논의 진행 / 정책연구센터를 기초로 하되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회원토론방식으로 운영
- 정책연구센터 심화회의 2회 개최 / 회원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10대 과제중 주요 제안 및 논의 과제를 5개 과제로 압축
- 민관정책포럼 TFT회의 3회 개최 / 5대 주요제안과제에 대한 1차 워크숍 진행 및 3대 과제로 재선정, 이후 선정된 3대 주요제안 정책과제에 대한 확정 및 세부 제안내용 정리

Ⅱ 세부 정책 과제

1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

1) 현황

○ 현 정부 참여예산제도 확대 강조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강조함.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책 및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함.

○ 충북도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됨.
- 충북도도 2011년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도민 60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6개 분과에 각10명씩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고 있음

○ 충북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힘

- 충북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8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그 결과 226개 1,769억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음

2)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모호

- 2018년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후순위 사업이 반영되거나 선순위 사업이 삭감되는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려움
- 현재 도민이 제안한 사업과 관련한 정보도 알기 어려움

○ 형식적 운영에 머무른 참여예산연구회

- 조례에 의하면 참여예산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형식적 회의 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조사, 제도 운영 평가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개선과제

○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함임
- 충북도 예산편성과정의 도민참여가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전환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4) 정책요청 사항

○ 주민참여 예산으로 자체수입의 1% 책정

-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 제안된 사업이 선정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 자체수입의 1% 배분.
- 도민 제안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제안 등에 예산 배분. 도내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감시, 환류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10억 이상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점진적 확대
- 위원의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참여예산연구회 기능 정상화

- 참여예산연구회가 충북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운영

○ 주민예산학교의 내실화 및 확대 운영

- 기본교육, 심화 교육, 타 교육과의 연계 등 예산학교 내실화
- 대상별 맞춤교육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산학교 개최 시간 다양화

2 도정혁신을 위한 민관협치

1) 현황

○ 문재인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2017년 7월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회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하는 한편
- 올해 4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부는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배경으로 △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 △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 참여민주주의 완성 △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들고 있음
- 추진계획은 3대 전략(사회적 가치¹⁾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7대 과제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민참여와 공정으로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 충북도, 도정혁신 실행계획 수립

- 충북도도 지난 4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정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음.

1)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중

- 실행계획은 3대 전략(도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충북, 낯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충북) 3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됨.

비 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
목 표	함께하는 혁신으로 더 든든하고 행복하게
3대 전략	1. 도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충북 3. 낯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충북
전략1	도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 ▶ 주요 재정사업 평가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 과제2.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임용목표 달성 ▶ 위원회 여성 위원비율 40%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3.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함께 생각함’ 등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참여 역량 강화 ✓ 과제4.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충북이 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회의실 등 공공자원 주민 개방 확대 ▶ 도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과제5.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 칸막이 없는 협업으로 도민안전 확보 ▶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도입으로 공유·소통 환경조성
전략3	낯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6. 도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 원천차단 ▶ 공직사회 고질적 부패 근절 문화 조성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 과제7. 도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거) 실행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 재정낭비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연계한 우리 도 추진과제(39개) 중 중점추진과제(17개) 표시

- 충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도정의 방향은 항상 “도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민은 정책의 수요자뿐 아니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을 바꾸고, 주요 정책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2) 문제점

○ 충북도의 도정혁신 계획의 핵심은?

- 충북도의 도정혁신 계획은 대체로 정부혁신 계획 일부와 충북도의 기존 사업을 재배치한 측면이 있음. 도정혁신을 위한 충북도의 변화, 핵심 계획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중요한 것은 도정혁신을 위한 충북도의 고민이 담긴 계획임

○ 충북도의 도정혁신 가치와 목표가 공유되고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 자치단체가 자칫 중앙정부의 사회혁신·정부혁신 평가에 매몰될 경우 실질적 혁신을 이루기 어려움
- 도정혁신은 충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에 대한 가치와 목표가 도청 공무원들과 공유되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함

○ 도정혁신 계획 추진으로 도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가능한가

3) 개선과제

○ 충북도정운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도정에 참여하는 도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를 가진 도민을 적어도 대등한 파트너,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충북도정 운영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음.

이러한 도민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충북도정의 혁신이자 또 다른 혁신의 밑바탕이 될 것임.

4) 정책 요청 사항

○ 합의에 기반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 주권자인 도민의 도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장
- 민관협치는 민관의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진행
-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치위원회 신설

-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지역형 협치 기본계획)
- 매년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민관협치 평가보고서 지방의회에 제출

○ 충북도의 민관협치를 위한 논의 기구 가동

- 충북도의 민관협치를 진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논의 기구 마련
- 충북도의 현재와 타 지역의 사례, 충북도의 민관협치 목표 등에 대해 논의
- 논의 과정을 통해 충북도의 민관협치 가치와 목표 등 설정 및 공유

3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북도를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1) 현황

○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예상

-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하였으며,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 헌법 안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함
- 지방분권 중에서도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관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어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충북도 개방형 감사관, 매년 공무원으로 임용

- 독임제 감사관은 감사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충북도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도청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음. 감사관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2) 문제점

○ 자체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

-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으나, 도청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 확보에 취약
- 독임제의 경우 감사기구 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전횡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나, 감사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경력 등으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울 것임

○ 지방분권에 대응한 견제 감시 기능 미약

- 지방분권 강화 이후 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단 미약

3) 개선과제

○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장 혹은 관료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확보가 필수적임. 감사 제도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의 진행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구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음

4) 정책 요청 사항

○ 합의제 기구(감사위원회) 설치

- 충북도 감사위원회 설치. 2011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합의제 감사기구(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5개 광역자치단체(제주, 충남, 세종, 서울, 광주)에서 운영하고 하고 있음.
-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은 충북도의회 동의 얻어 단체장이 임명
- 감사위원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시 독립성 최대한 존중

< 감사위원회 관련 주요 지방정부 현황 >

구분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설치 목적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 도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자체감사기구 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설치 시기	2006 년 7 월	2015 년 1 월	2011 년 7 월	2015 년 7 월	2015 년 12 월
소속	도지사 소속	시장 소속	도지사 소속	시장 소속	시장 소속
독립성 규정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	직무상 독립
위원장 직급	2 급 상당 (지방정무직)	3 급 상당 (지방정무직)	3 급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급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3 급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위원회 구성	7 명 위원장(상임)1 명, 비상임위원 6 명	7 명 위원장(상임)1 명, 비상임위원 6 명	7 명 위원장(상임)1 명, 상임위원 1 명, 비상임위원 5 명	7 명 위원장(상임)1 명, 비상임위원 6 명	7 명 위원장(상임)1 명, 상임위원 1 명, 비상임위원 5 명
감사인력 (17.9 기준)	54 명	20 명	39 명	119 명	36 명
감사직렬 (직류) 적용여부	감사직렬 5~7 급			감사직렬 5~7 급	

김남운 전농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I 정책안 도출 과정 설명

1 참여주체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회, 4-H)와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북축산단체협의회 등

2 논의 과정

- 전농충북도연맹 대의원 대회를 통해 충북농정 주요정책 도출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를 통해 도지사 후보 농정공약 대토론회 주요정책 도출

II 정책 과제 명

1 농민수당 도입

- 충남공익형 직불제 도입(기존 면적 대비 지급하던 방식을 농가단위로 전환)
- 전남 강진군 농가직불금 도입(연간 70만원)
- 충북형 농민수당 도입(정책협약)

2 충북농정협치기구 설치

-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 설치(농업비서관 신설) 및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 설치
- 충남 3농혁신위원회, 전북 삼각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등
- (가칭)충북농정개혁위원회 설치(정책협약)

Ⅲ 세부 정책 과제

1 농민수당 도입

1) 현황

- 2017년 농가경제 조사에서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38,239천원이었으나 농업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함.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구성비	2017	구성비	증감률 ('17/'16)
농 가 소 득	34,524	34,950	37,215	37,197	100.0	38,239	100.0	2.8
농 업 소 득	10,035	10,303	11,257	10,068	27.1	10,047	26.3	-0.2
농업외소득	15,705	14,799	14,939	15,252	41.0	16,269	42.5	6.7
이 전 소 득	5,844	6,819	7,906	8,783	23.6	8,902	23.3	1.4
비경상소득	2,940	3,029	3,114	3,095	8.3	3,022	7.9	-2.4

※ 자료 : 통계청

- 경지규모별 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 산	부 채
	2016	2017	증감률			
평 균	37,197	38,239	2.8	30,640	505,881	26,375
0.5ha 미만	34,434	34,319	-0.3	29,457	387,832	16,854
0.5 ~ 1.0	33,531	33,731	0.6	27,950	507,208	23,770
1.0 ~ 2.0	33,745	34,843	3.3	30,539	507,636	23,416
2.0 ~ 3.0	41,227	40,811	-1.0	29,799	555,013	26,388
3.0 ~ 5.0	46,467	48,246	3.8	34,710	685,668	45,699
5.0ha 이상	64,604	76,658	18.7	45,056	872,816	80,591

※ 자료 : 통계청

○ 경지규모별 농가 및 비중

구분	2000년(A)	2005년	2010년	2015년(B)	비중변화 (B-A)
경지 없는 농가	14(1.0)	17(1.3)	14(1.2)	10(1.0)	-
0.1ha 미만	30(2.2)	38(3.0)	23(1.9)	22(2.)	-0.2%p
0.1ha~0.3ha 미만	203(14.7)	216(17.0)	251(21.3)	270(24.8)	10.1%p
0.3ha~0.5ha 미만	207(15.0)	203(16.0)	251(21.3)	270(24.8)	2.8%p
0.5ha~0.7ha 미만	169(12.2)	152(12.0)	199(16.9)	194(17.8)	-0.7%p
0.7ha~1.0ha 미만	209(15.1)	178(14.0)	151(12.8)	131(12.0)	-3.1%p
1.0ha~1.5ha 미만	219(15.9)	174(13.7)	142(12.0)	114(10.5)	-5.4%p
1.5ha~2.0ha 미만	132(9.5)	107(8.4)	87(7.4)	71(6.5)	-3.0%p
2.0ha~2.5ha 미만	70(5.1)	56(4.4)	47(4.0)	36(3.3)	-1.8%p
2.5ha~3.0ha 미만	44(3.1)	37(2.9)	32(2.7)	26(2.4)	-0.7%p
3.0ha~5.0ha 미만	61(4.4)	61(4.8)	57(4.8)	49(4.5)	0.1%p
5.0ha 이상	24(1.7)	33(2.6)	40(3.4)	39(3.6)	1.9%p
계	1,383(100)	1,273(100)	1,177(100)	1,089(100)	

※ 자료 : 농업전망 2018

○ 2017년 농가경제 조사에서 광역시도 농가소득 비교

(단위 : 천원)

광역시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기도	42,563	7,539	23,723	7,235	4,065
강원도	37,275	8,920	16,542	9,006	2,807
충청북도	38,288	8,046	16,757	10,760	2,725
충청남도	36,040	8,428	15,833	8,584	3,194
전라북도	35,235	9,831	13,370	9,347	2,687
전라남도	39,660	12,075	14,756	9,939	2,890
경상북도	35,962	12,929	12,532	8,239	2,262
경상남도	36,752	9,153	13,825	9,870	3,904
제주도	52,922	13,302	28,790	7,651	3,179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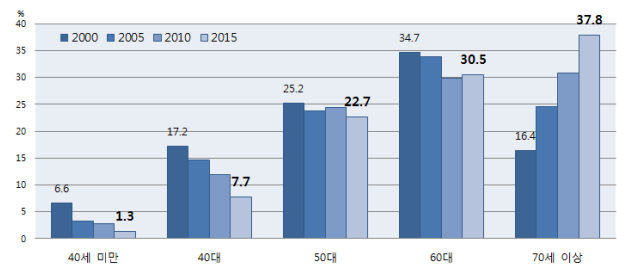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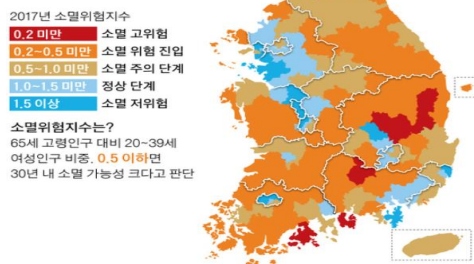
○ 민선7기 전국광역시도 농민수당과 유사한 공약

- 충북 : 농민기본소득제
- 강원 : 강원도형 직불제 도입(소농직불금)
- 충남 : 충남형 공익직불제 확대
- 전북 : 전북형 공익직불제 도입, 농민수당 TF 구성
- 전남 :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 경남 : 경남형 공익직불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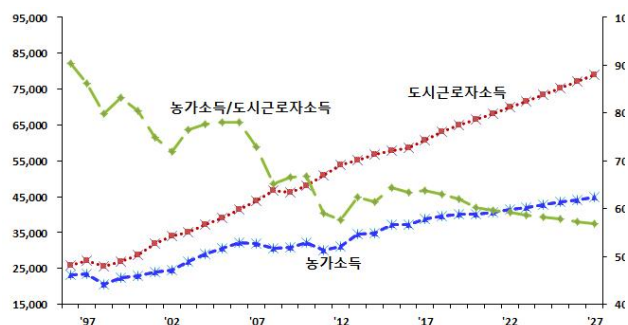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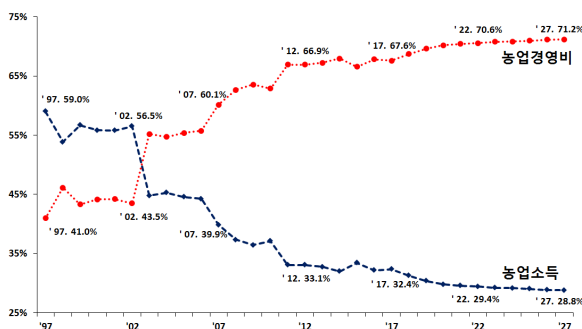
2) 문제점

○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농촌인구 급속히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가능성 대두되고 있으며, 농가경영주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여기에 대한 지방농정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음

■ 228곳 지자체 소멸위험도는?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업보조사업(직불금, 농자재지원사업)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다보니 중소농의 경우 지원금액이 적음



※ 자료 : 농업전망 2018

3) 개선과제

-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은 2015년에 비해 1.1% 비중이 감소하였으므로 최소한 7% 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증액된 예산으로 농민수당을 신설

(단위 : 천원)

농정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업정책과	117,651,105	113,352,847	95,357,450	92,785,798
유기농산과	113,043,741	110,199,334	115,985,329	129,628,794
원예유통식품과	18,054,813	29,010,625	25,717,905	21,148,452
축산과	37,212,565	44,855,981	32,562,943	31,531,994
합계(B)	285,962,224	297,418,787	269,623,627	275,095,038
충청북도 예산(A)	3,758,800,731	4,042,521,806	3,868,481,787	4,180,989,757
농정국예산 비율(B/A)	7.6%	7.3%	6.9%	6.5%

자료 : 충청북도 본예산, 산림녹지과는 새로 신설된 환경국으로 편입되어 삭제함

- 벼 재배농가에게 지원되는 충북도비 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이를 면적을 비례해서 주면 중소농가는 지원이 아주 적어짐.

(단위 : 천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252,000	252,000	200,000	200,000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2,666,836	2,615,580	2,200,000	2,200,000
벼 우량종자대 지원	1,189,960	1,083,560	829,650	829,650

자료 : 충청북도 본예산

4) 정책요청 사항

- 농업예산(농정국)을 전체 예산대비 7.6%까지 올리고 증액예산으로 충북형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충청북도 예산을 4조 2천억으로 할 경우
 - 1%에 해당하는 예산은 420억
 - 2016년 기준 충북농가 수 74,292
 - 농민수당 56만원 지급 가능
 - 시군비를 5:5로 할 경우 지금 당장 120만원 가능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충북농정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함

2 충북농정협치기구 설치

1) 현황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정협의 기능이 미약하고 예산도 부족

(단위 : 천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함께하는 충북농정포럼 운영지원	40,000	20,000	5,000	5,000
농정시책 추진	43,000	43,000	32,500	43,000
농어민단체 간담 및 행사 추진	8,000	8,000	6,000	8,000

자료 : 충청북도 본예산

- 농정심의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충북연구원에 농업연구원은 1명에 불과하고 충북농정포럼 예산은 2015년 40,000천원에서 2018년 5,000천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 전북의 삼각농정위원회와 같은 농민들의 의견이 충북 농업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치기구 필요

-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도 3억이 넘고, 그 중 삼락농정포럼 예산이 1억이나 되며 삼락농정위원회는 행정부시사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삼락농정 추진 체계>



- 현재 농림부도 산적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개혁위원회(위원장 정현찬)를 두고 있고,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둘 계획이며, 농정협치기구인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충북도 이를 위한 기구가 필요함

- 민선7기 전국광역 시도 농정협치기구 공약

- 충북 : 농정개혁위원회 설치(정책협약)
- 강원 : 농민 참여 예산제
- 충남 : 농업회의소 설치
- 전북 : 삼락농정위원회
- 전남 : 전남농정위원회 설치
- 경남 : 도지사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기구와 농업회의소 설치
- 제주 : 농업회의소 설치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충북도지사 농업공약

농촌(農村)을 농시(農市) 개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 농촌 취·창업 청년에게 3년간 소득지원(시범사업)
- 대이음 청년농업인 농업안정자금 우선 지원

■ 농촌에 농업도시 즉 ‘농시(農市)’를 도입

- 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 문화시설, 의료시설 확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 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
 - 기본소득 이하 농가에 실소득과의 차액 보전
 - 정부와 협의 단계별 지원
- 첨단·유기농업 확대
 - 스마트팜 조성
 - 괴산유기농 국제연수원 유치
 - 유기농업 인증 경지면적 확대 지원
 - 유기농 마을 육성, 유기농 작목 선택 지원
 - 유기농 식자재 판로 확대
 -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공기관 확대 보급
- 국내 최대 괴산 자연 드림파크 활성화
- 제천의림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농촌 마을회관을 행복센터로 증·개축
- 옥천 국립묘목원 조성
- 농·산림 자원 가공(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
- 도내 전 지역에 농업용수 확대 공급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상생프로그램 개발
- 약취·오펜수 축사 저감 관리
-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확대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 도지사 농정공약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 충북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 농민수당 도입 및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
 - 여성행복바우처 확대 및 마을공동급식
 - 청년행복바우처 신설 및 청년농업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무허가축사 합법화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 Non-Gmo 학교급식 실현
 - 충북농정협치기구인 (가칭)충북농정개혁위원회 조직

2) 문제점

- 예산부족으로 농단협 전임 실무자가 없어 정책제안 기능이 미흡
- 도지사 공약사항과 충북농단협과의 정책협약 사항을 집행하기에는 현 조직으로는 어려움

3) 개선과제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예산 사용 변경(연찬회→토론회)을 통해 정책기능 강화
- 충북농정포럼을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이후 농정협치기구에서 주관

4) 정책요청 사항

- 도지사 직속 (가칭)충북농정개혁위원회 설치로 실질적인 농정협치
- 하반기 추경을 통해 (가칭)충북농정개혁위원회 TF 예산을 확보하여 광역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농민기본소득제 등 농정공약 실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를 위촉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함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구성 방안

맹승진 충북물포럼 사무처장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I 정책안 도출 과정

1 참여주체

- 충북물포럼은 충북의 물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거버넌스 단체임
- 대한토목학회 충북지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푸른 세상GREENWORLD, K-water 금영섬권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2 논의 과정

- 2013년 12월 17일 창립과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매년 2회에 걸친 정기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토론회의 대주제는 포럼의 임원 및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음
- 토론회는 ‘물과 안전’, ‘대청호 규제’, ‘충북의 가뭄’, ‘충북 물 산업’, ‘충북의 홍수’ 등 충북의 물 현안 문제를 대주제로 선정하고, 대주제별로 3개에서 4개의 세부주제를 결정하여 개최함
- 2017년의 경우에는 7월 16일 청주일대의 홍수로 인해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홍수피해 저감 대책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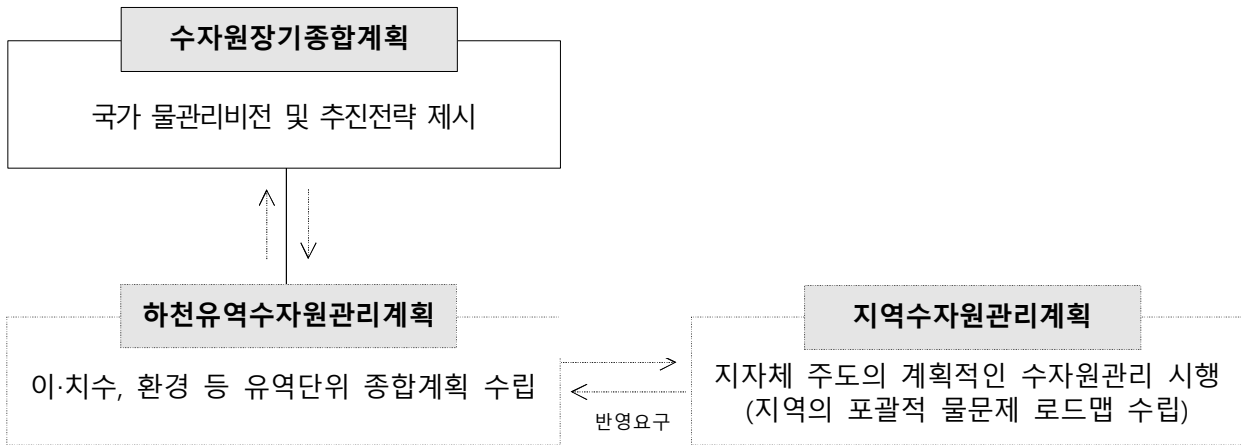
Ⅱ 세부 정책 과제

1 효율적인 충북의 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1) 현황

- 충북도내에 유하하는 금강은 충북, 전북, 대전, 충남이 공유하고 있음, 한강은 강원도, 충북, 경기도, 서울, 인천이 공유하고 있음
- 대청댐은 충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청댐에 저류된 물은 충북, 대전, 충남 등에서 생·공·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음
- 충주댐 역시 충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류된 물은 수도권 등에 생·공용수로 공급하고 있음
- 전북은 2000년대 초반에 전북의 물관리를 위한 ‘전북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충남은 2013년 충남 서북부의 가뭄을 겪은 후, 2015년 충남의 물관리를 위한 ‘충남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강원도는 2017년 가뭄과 홍수를 겪은 후, 2018년 강원도의 물관리를 위한 ‘강원도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

- 중앙정부에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제정('17.1.17)으로 수자원 계획을 국가 - 유역 - 시·도 계획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료 1)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이·치수·환경 종합계획인 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개편
 - * 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영산강권, 섬진강권 등 5개 권역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 * 수자원의 통합개발·이용, 하천환경 개선 등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물관리종합계획



<국가 및 지역 물 관리 법정 계획간 연계>

2) 문제점

- 충북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도 대책이라고는 지하수 관정 개발에만 그침
 - 지하수는 유한자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임
- 2017년 7월 16일 청주일대의 극한 홍수로 유례없는 침수피해를 겪음
- 동일수계내에 위치한 타시도의 논리적인 수자원관리계획에 의해 충북이 우선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짐
 - 물은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충북지역의 물을 타시도에서 선점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응할 방안이 없음
- 기후변화로 인한 2030년 이후의 극심한 가뭄이 도래한다면 현재와 같은 물리로는 대응이 어려움

3) 개선과제

- 충북 수자원 관리 계획내 포함되어야 할 주요항목
 - 충북의 물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 물 이용 종합계획
 - 치수 종합계획
 - 수질현황, 전망 및 수질개선 방안
 - 하천환경종합계획
 - 하천 생태, 물 문화, 물 산업 활성화 방안
 -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물 산업 증대 방안

4) 정책요청 사항

-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은 충청북도의 물 관리 Needs를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물관리 자치권을 강화하고, 국고 반영근거 마련 등 실행력 강화 기대
-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 한강은 강원도, 수도권과 협의하고, 금강은 전북, 대전, 충남과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수자원관리계획에는 이·치수, 물환경, 물문화, 물산업 등이 포함되어 타시도의 계획과 차별화 되어야 함
- 기타 충북물포럼에서 제안하는 충북의 물과 관련한 정책 제안(참고 2)

2 대청호권역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 추진

1) 현황

-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하여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 가능함
- 그간 대청호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와 실천가능한 수질개선방안 제시, 홍수조절지 오염원 저감 방안 제시 등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전반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청호 유역내 오염 현황, 저감 가능한 지점과 수질개선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였음
- 대청호 수질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유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청호유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주민의사결정구조 개선, 대청호특별대책지역 유역협의체 구성 방안 마련 절실하게 필요함
- 팔당호는 대청호와 마찬가지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강 특별법에 의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전국에 2곳만 지정되어 있는 수질관련 특별대책지역인데 팔당호에만 있음

2)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어 수질오염물질 방류, 가축사육,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어패류 채집, 하천구역에서의 경작, 공장설립 등에 제제를 받음
- 자연보전권역 지정되어 개발사업 해위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대학, 공공청사, 업무·판매 복합용 건축물, 연수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 특별대책지역 지정되어 규모별 오·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폐기물 배출시설, 용도변경, 내수면어업, 유도선사업, 골프장 및 골프장 연습장, 광물 채굴 및 채석, 집단묘지 제한
- 수변구역 지정되어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식품접객업, 관광숙박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 입지
-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3) 개선과제

-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업 관련 사례 조사
 -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사례 등 관련 사항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 협의의 실태 및 한계와 개선 방안
- 수질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한 주민지원사업 활성화와 수질개선 사업과 정책성과 전망 도출
- 단계별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T/F 구성
 - 이상적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방향과 현실 가능한 구성 방향 등 제시
-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주민의 정책결정 참여구조 개선
-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관련 정책 및 예산 근거 마련
-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방안 도출
- 특별대책지역 구성원 간담회로 구성 방안 모색
 - 예) 대청호유역 주민과 민간·환경단체, 시군구 수계담당, 면단위 총무계장,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관련 담당자 등이 참여
 - 운영 관련 제안 사항과 제한 사항 극복 방안 제안

4) 정책요청 사항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 성과 분석 및 평가체계 구축
- 주민 및 관계기관 간담회,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소통형 거버넌스 구축

- 구체적인 대청호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방안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수질정책협의회 구성으로 대청호유역 수질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참고 1

수자원의 조사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지역수자원관리 계획 관련부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2.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p>④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 제6항을 준용한다.</p>	<p>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p>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p>	

참고 2

충북물포럼 제안 추진전략별 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유역 환경	M1. 대청댐 상류 3군의 유역 환경 현황분석	M1.1 보은군 유역환경 현황 분석
		M1.2 옥천군 유역환경 현황 분석
		M1.3 영동군 유역환경 현황 분석
	M2.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 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M2.1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고도화
		M2.2 상수도 보급을 향상
	M3. 생활환경 및 유역환경 개선	M3.1 생활쓰레기 수거 및 적정 처리시설 확충
		M3.2 산업 및 농업 쓰레기 수거 및 적정 처리시설 확충
	M4. 오염물질 배출산업을 친 환경산업으로 전환 유도 정책 수립	M4.1 지역이나 마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에너지마을 조성
		M4.2 체험 및 체류형 주말농장 등 관광농업육성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M4.3 친환경 유기농산물 단지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2. 수자원	M5. 인문사회환경 개선	M5.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도시 조성
		M5.2 이야기 거리가 있는 문화, 역사 등의 발굴을 통한 품 격 있는 향토문화 정착
		M5.3 불필요한 환경규제 완화와 유역 경제체질개선 유도 정 책 개발
	M6. 이·치수관리	M6.1 기후변화로 인한 국부적 집중호우 발생 및 가뭄 대비
		M6.2 지속적인 하천 하도 및 시설물의 계획, 설치, 관리
		M6.3 유역단위 치수관리
		M6.4 북부와 남부에 위치한 다목적댐 광역상수도를 바탕으 로 급수지역 확대
		M6.5 가뭄을 대비하여 풍부한 충북 수자원의 수리권 확보
		M6.6 기존 댐, 저수지의 용수 재배분
		M6.7 기존 댐의 재개발과 소규모 저수지 개발
		M6.8 수원시설(댐, 보, 저수지 등) 연계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M6.9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M6.10 지하수 함양을 위한 유역관리 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M6.11 저개발(LID) 방식을 통한 빗물침투 및 지하수 함양
		M6.12 청주, 충주 등 대설 피해 다발 지역의 대비
		M6.13 충북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3. 수환경	M7. 수질환경	M7.1 댐.저수지 수질개선 및 관리
		M7.2 소규모 저수지의 다각적(소방, 관광, 이치수 등) 활용 방안 검토
4. 친수환경 및 물문화	M8. 친수 및 관광자원 활성화	M8.1 대청호 수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M8.2 충주호 상류 수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
		M8.3 댐주변 정비/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친수 공간 조성
		M8.4 농업용저수지 관광자원화
		M8.5 진천 농다리 가치 제고
		M8.6 충북 물포럼 물 탐방 프로그램 개발
		M8.7 농업용 저수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
		M8.8 청원 생명축제와 연계한 오창저수지 수상뮤지컬 설치
		M8.9 영동빙벽장 활성화
		M8.10 송호관광지 활성화
		M8.11 청남대-대청호-문의문화재-무심천 물문화 축제
		M8.12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통합된 물축제 개최
	M9. 제도 및 규제관리	M9.1 다목적댐 상수원에 의한 개발 제한 및 규제의 해소 방안 마련

김관성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I 존엄성을 가진 노후화 ; Aging in Place

1 참여단체 및 대표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무지개도서관(시각장애인), 대한노인회 충북지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보건과학대학, 충북자연학습원, 청주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충북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연합회, 재가장기요양시설협회

2 논의 과정

- 1차 대표자 회의: 2018.4. (참여주체 대표회의)
 - 근로환경 개선(지역아동센터 조리원 배치, 처우 등)
 - 주거복지 및 유디환경 교육 필요성
- 2차 실무자 회의 : 2018.5. (충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실무자회의)
 -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환경 논의
- 3차 포럼 참석: 2018. 5 (전국실버산업전문가포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4차 복지분과 의견청취 : 2018. 6

3 Aging In Place 개념

- 65 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사회관계가 지속된 장소에서 노화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임. 내가 사는 주거, 집은 독립, 자치, 위안, 보안, 통제, 보호, 역사 및 가족 추억을 비롯한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주요 문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령기가 되면 신체 및 서비스 환경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서비스 이용환경 마련이 필수적임.
- UN의 제 1조 22조 권고안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환경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지원 하에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해 UN은 정책적으로 독립적인 고령기 생활이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Aging In Place는 노인, 가족 및 보호자를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복지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 지원으로 연결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택이 진화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핵심 단계는 집을 평가하여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임.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은퇴 후 고령기에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속에서도 시설입소 보다는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자’ 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방식을 의미함.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따르면 노인들은 최대한 늦은 나이 까지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며 고령기에는 주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며 신체 기능 악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이 중요함. 고령자의 주거욕구 조사결과 고령자 본인의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의료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파악되었음.

- 싱가포르 ;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도시재생

싱가포르는 신체적 장애를 안게 되는 노인 인구가 앞으로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in-place)”의 실현을 위해 포괄적인 건조 환경의 정비 필요함(에이징 인 플레이스란 사람들이 정든 환경에서 나이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며 다시 말해서 노인들을 가족이 돌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함)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의 개념은 다양한 연령대와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니즈(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BCA 의 임무에 적용되었고 이러한 목표 달성의 주요 과제는 1990년에 도입된 이용 편의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수많은 건물들을 개량하는 것으로 건물내부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 역시 베리어프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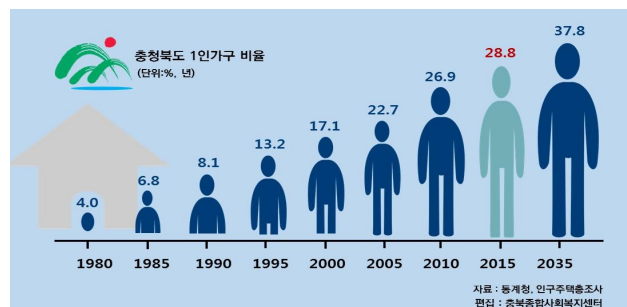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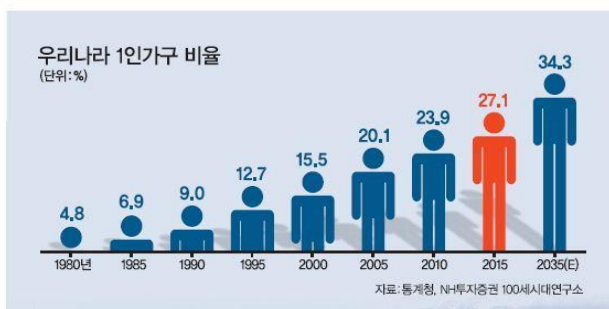
2006년 BCA는 이용 편의성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유니버설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전체론적이면서 협동조합주의적 성격을 띠는 본 계획을 위해 BCA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싱가포르의 이용하기 쉬운 건조 환경 조성을 위한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힘쓰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제2차(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명시한 바 있음(국토교통부는 올해 인천 옹진, 충북 제천, 전남 진도·광양 등 11곳을 제2차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로 선정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특히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친화형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각이 확산하고 있음

4 충북 고령자 주거실태와 현황

-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차지하는 인구구조 비율이 높은 충북의 2016년 1인가구는 30.3%(187,377가구)로 전국 평균인 27.9%보다도 2.4%가 높음.

[전국·충북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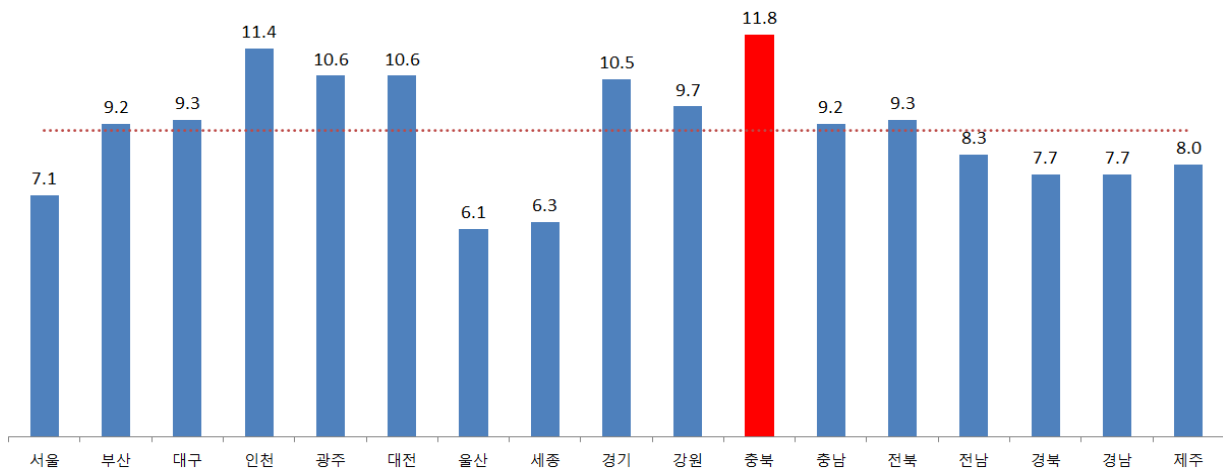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2015년 대비 2045년 구성비 증감을 보면 전국 평균 9.0%의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충북은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1인가구 2015년 대비 2045년 구성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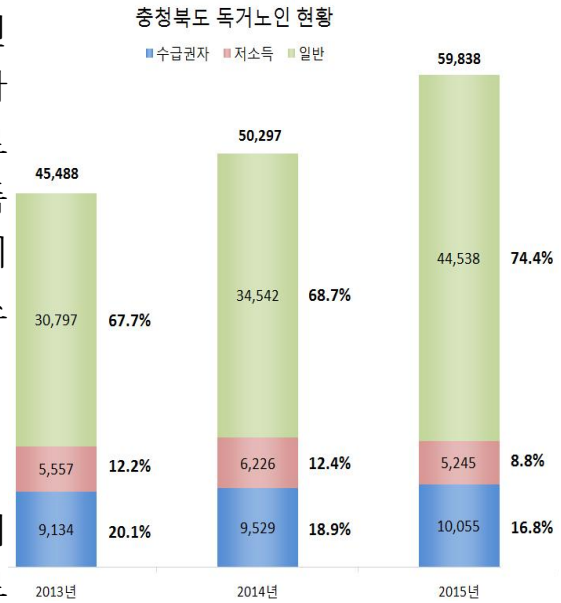
(단위 : %)

지 역	1인가구/총가구					2015년 대비 2045년 증감
	2015년	2017년	2025년	2035년	2045년	
전 국	27.2	28.5	31.9	34.6	36.3	9.0
서 울	29.5	30.8	34.1	35.6	36.7	7.1
부 산	27.0	28.4	32.0	34.9	36.2	9.2
대 구	25.8	27.1	30.7	33.5	35.0	9.3
인 천	23.3	24.6	28.4	32.1	34.7	11.4
광 주	28.9	30.4	34.6	37.6	39.5	10.6
대 전	29.1	30.7	34.3	37.2	39.7	10.6
울 산	24.4	25.4	28.4	30.2	30.6	6.1
세 종	29.1	30.3	32.2	34.2	35.4	6.3
경 기	23.4	24.7	28.4	31.7	34.0	10.5
강 원	31.2	32.6	36.2	39.2	40.9	9.7
충 북	28.9	30.3	34.1	37.8	40.6	11.8
충 남	29.5	30.8	34.2	37.1	38.7	9.2
전 북	29.8	31.2	34.6	37.6	39.1	9.3
전 남	30.3	31.5	34.4	37.1	38.6	8.3
경 북	30.4	31.5	34.4	36.9	38.1	7.7
경 남	27.5	28.6	31.6	34.2	35.2	7.7
제 주	26.5	27.8	31.3	33.8	34.5	8.0



출처 : 통계청, 2017

- 충북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20,753가구로 62.8%를 차지하고 있음. 2015년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된 이후 전체가구 수급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1인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비율은 2.1% 감소하였음.



- 2015년 충북 시·군 중 독거노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주시로 2013년보다 87.2%(4,121명) 증가한 8,845명이며, 충북의 독거노인 중 34.5%(20,631명)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음.

[충청북도 시·군별 독거노인 현황]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2013년	12,123	4,724	6,409	2,863	2,181	4,038	1,372	1,647	3,472	4,386	2,273
2014년	16,459	5,278	6,677	3,003	2,038	4,046	1,039	1,664	3,595	4,426	2,072
2015년	20,631	8,845	6,269	3,091	3,488	3,910	1,417	1,755	3,958	4,225	2,249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63.9%), 아파트 (27.7%),주택이외(2.7%)의 순으로 높은 반면,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 거주 용 건물내 주택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1인 노인가구가 밀집된 곳은 군(郡)지역이 높은 상황임.²⁾

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 - 시군구

충북 1인가구 주거형태(2016)

(단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주택	주택이외
전국	1인가구	50.8	27.9	1.7	8.7	2.2	8.8
	65세 이상 1인가구	56.1	30.5	2.1	6.8	1.2	3.2
충북	1인가구	59.0	30.4	1.7	2.2	1.6	5.1
	65세 이상 1인가구	63.9	27.7	2.5	2.0	1.2	2.7

5 문제점

○ 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 사고 건수는 5,7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건수(증감률)는 '14년 4,453건(16.2%), '15년 5,111건(14.8%), '16년 5,795건(13.4%) 사고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60.5%(3,506건) 가장 높았으며 사고유형으로는 침실·화장실 등에서 낙상(미끄러짐, 넘어짐), 침대·계단에서 낙상(추락 등) 사고가 47.4%(2,74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발생장소)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주택'에서 발생

-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주택'이 60.5%(3,506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도로 및 인도' 4.3%(246건), '숙박 및 음식점' 3.8%(2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주택	3,506	60.5
도로 및 인도	246	4.3
숙박 및 음식점	219	3.8
농·수·축산업 지역	176	3.0
의료서비스시설	174	3.0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35	2.3
복지 및 노인 요양시설	116	2.0
교통시설	113	1.9
기타*	1,110	19.2
계	5,7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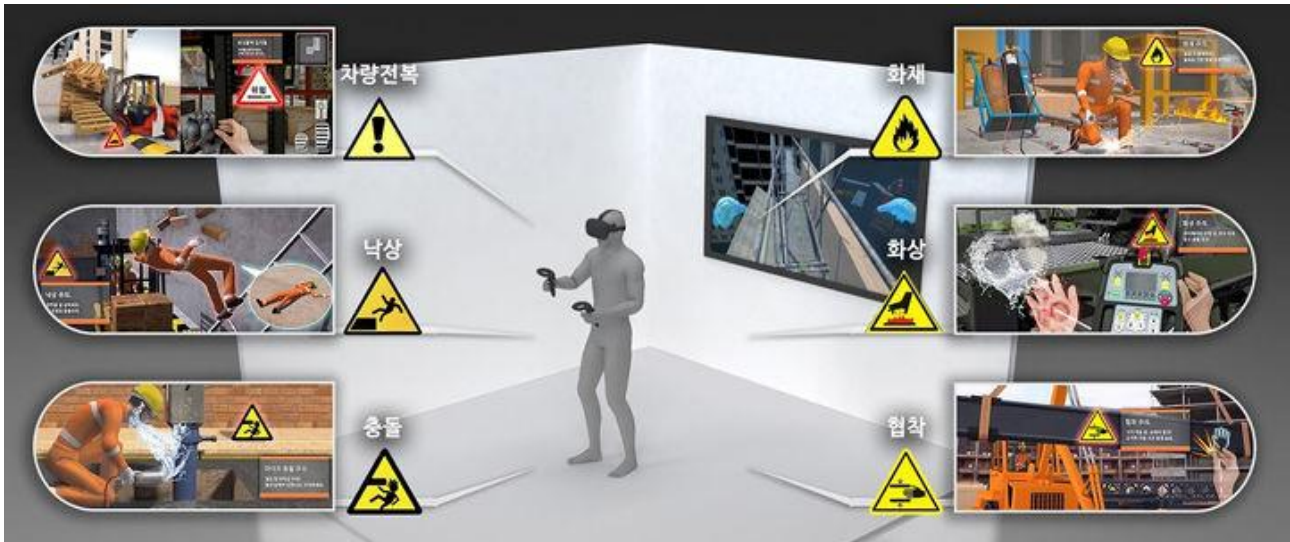
* 쇼핑시설, 스포츠/레저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등

6

개선과제

○ Aging in place에 따른 현실융합 VR 개발

- 가상현실 방문을 통한 주거복지의 중요성과 커뮤니티케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복지 인식개선

- 보다 안전한 가정방문 학습이 가능하며, VR교육을 통하여 주택 내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조치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이웃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도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해지도록 함

7

기대효과

- VR교육을 통해 주거환경의 위험성과 고령노인의 응급적인 상황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주거복지의 중요성과 대처능력 향상

- 노인복지관을 전달체계로 하는 노인주거문제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이창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부원장

I 정책안 도출 과정 설명

1 참여주체

-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약 230명
- 충북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약 180명
- 충북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 약 220명
- 충북청소년지도자 협의회(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상담센터, 청소년단체, 예비청소년지도자) 구성 10명

2 논의 과정

- 충북 청소년지도자 : 단체 밴드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책 의견수렴(04.01 ~ 05.10)
- 충북청소년참여위원회 : 정기회의 진행을 통한 정책 의견수렴(04.01 ~ 04.30)
- 충북청소년운영위원회 : 정기회의 진행을 통한 정책 의견수렴(04.01 ~ 04.30)
- 충북청소년지도자 협의회 : 협의회 간담회를 진행 각 분야별 의견 수렴된
의견 중 3가지 정책 확정
 - 1차 간담회 : 2018.05.11. 아동청소년 정책 의견 검토 및 정책의제 선별
 - 2차 간담회 : 2018.06.14. 아동청소년 정책 정책의제 확정

Ⅱ 정책 과제 명(핵심정책 과제명)

1 중복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 구축

-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조리원 인건비가 낮아 채용이 어려워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급식 조리원 파견이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보장하는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 지도자 처우수당 확대 및 대우수당 제도 신설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대우수당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대우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복지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충북 아동·청소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구축

- 지역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벗어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청소년육성정책이 요구됨. 청소년들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 반영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수행은 결과적으로 지역내 청소년활동은 안정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의 토대가 됨

Ⅲ

세부 정책 과제

1

충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원 인건비는 보조받는 급식비 전체 금액의 20% 내로 지급 가능하게 되어 있어 낮은 임금으로 조리원 채용이 안되고 있어 급식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안정적인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부 타시도에서는 급식 조리원 파견 또는 급식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음.
- 급식종사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개선과제

-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급식 조리원을 파견 해주거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낮은 급여로 이직율이 높은 급식조리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요청 사항

-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원 파견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급식종사자 파견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역아동센터 배치

2

청소년 지도자 처우수당 확대 및 대우수당 제도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낮은 임금수준으로 타 복지 분야에 비해 높은 이직률이 높은 편임.
-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청소년 현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제대로된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대우수당을 받고 있어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수당 형태로 보전 받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은 대우수당 제도가 없는 상황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근무연차 별로 수당지급

근속연수	지급금액	비고
3년 미만	140,000원 / 월	도비 보조율 청주 30%, 그 외 시군 40%
3년 이상 ~ 7년 미만	150,000원 / 월	
7년 이상	160,000원 / 월	

2) 개선과제

- 현행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의 증액과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대우수당 제도를 청소년관련 종사자에게도 신설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에 비해 낮은 급여의 보전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근속을 보전함.
- 모든 청소년지도자들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차별 없이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도자들 사이의 잔존해 있던 다양한 갈등요소 제거

3) 정책요청 사항

- 청소년관련 종사자 현황 파악 및 예산 확보
- 처우개선비를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기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에서 모든 청소년 기관 및 단체로 확대
- 청소년지도사의 대우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3

충북 아동·청소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충북, 행복한 꿈을 꾸는 지역사회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청소년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뿐 아니라 지자
체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통한 중장기적인 기획 및 플랜이 있어야
지속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
- 충청북도는 매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 있지만, 그 외에 체계적·전문적인
청소년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비전
및 목표, 전략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는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타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

no	지자체	연도	사업명	공개여부
1	대구광역시	2014-2018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공개
2	서울특별시	2017-2021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공개
3	충청남도	2014-2017 2017-2022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공개(국회도서관) 공개(국회도서관)
4	세종시	2017-202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
5	광주시	2016-2020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

2) 개선과제

- 행복한 충북 청소년을 위해 활동,보호,상담분야를 포괄하는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충북지역 청소년 환경현황, 청소년 욕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민(기관 및
단체), 관(지자체)의 연계협력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 충청북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3) 정책요청 사항

-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도 예산중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예산 0.5% 확보)
- ‘충북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 청소년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한 민관 거버넌스, ‘충북청소년육성협의체’를 수립 및 시행
- 청소년활동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시설운영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가칭 ‘청소년활동지원조례’로 제정

IV 기타 정책 과제

1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서원, 흥덕 등)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진로, 체험,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의 장임.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한 문화조성의 주체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1)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구마다 한 개씩 설립하게 되어 있음. 현재 청주시에는 통합청주시가 됨에 따라 상당, 흥덕, 서원, 청원구로 지역이 넓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흥덕구와 서원구에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필요 함.
- 또한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년)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각 지역별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음.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7.12.31. 기준)

(*직영)

시군별 시설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도
합 계		45	3	3	7	8	3	2	2	1	5	4	6	1
공공 시설	수련원	4								1*	1	1		1
	수련관	8	2	1	1		1*	1*	1				1*	
	문화의집	10	1		1	1	2**				1*	2*	2**	
	유스호스텔	1			1									
	야영장	0												
	소계	23	3	1	3	1	3	1	1	1	2	3	3	1
민간 시설	수련원	14		1	3	4		1			3	1	1	
	문화의집	0												
	유스호스텔	8		1	1	3			1				2	
	야영장	0												
	소계	22	0	2	4	7	0	1	1	0	3	1	3	0

2) 개선과제

-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아동청소년 카페공간을 통해 청소년들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은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학업에 지친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함으로써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제공
- 교육 문화 사업으로 청소년교육문화강좌, 청소년운영위원회, 각종 문화행사 진행
- 체험활동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지원, 가족사업, 청소년봉사단 등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기개발과 다양한 경험 획득
- 학교 및 지역연계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업 운영을 통하여 시민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

3) 정책요청 사항

- 여성가족부와 국비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지자체의 예산 절감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마련

현행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로는 담당공무원의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통해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1)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 됨.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통해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지방 청소년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 유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2018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평가의 정책지표로 수련원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추진 중.

2) 개선과제

- 청소년전담공무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중앙·지방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향상 등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3) 정책요청 사항

- 조례 개정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민간전문가를 배치 함.
- 충청북도에 최소 2명 이상의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을 배치(시·군에도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여 배치)
- 청소년관련 부서(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분야는 임금표준안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임금편차가 심하며, 임금수준도 매우 낮아서 통일된 임금 표준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 해줌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청소년지도자의 임금 표준안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 간에 편차가 심하며, 임금수준도 낮아 이직률이 높음.
-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시설 및 높은 시설당 청소년 인구수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주요국가의 공공·민간 청소년수련시설당 청소년 인구수('13)

구분	인구(천명)	청소년(천명)	시설수	시설당 청소년인구수
한국	50,220	10,260	753	13,626
독일	82,320	13,686	31,185	440
프랑스	63,750	15,937	31,600	504
영국	60,776	11,713	3,287	3,564
일본	127,510	29,794	5,519	5,400

2) 개선과제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임금표준안을 마련하고 임금표준안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3) 정책요청 사항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와 관련된 단일화된 임금체계 마련

-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청소년지도사 급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 청소년 쉼터 등 소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위원)

I 정책안 도출 과정 설명

1 참여주체

- YWCA 충북협의회(청주YWCA, 충주YWCA,제천YWCA 광역단위 네트워크)
- 도단위 여성일자리 기관(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새일본부)
-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사)사람과경제, 더나은세상을 만드는 연구소
 - 6.13.지방선거 여성단체 연합, 여성공약제안을 중심으로 검토
(충북여성정책포럼, YWCA충북협의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2 논의 과정

- 주제 선정의 배경 / 여성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일자리 정책은 현재 시군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중앙정부 역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일자리는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점과 일자리를 구하는 지점, 그리고 그 양자의 연계를 모두 지역 중심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만 체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도 지역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여성 일자리 대책은 그 핵심에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여성 일자리 대책’은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자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기본계획(‘18년~’22년)”에 제시되고 있다.

- 문재인정부의 “여성일자리 대책”은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자치단체가 정부부처 협력없이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성일자리정책의 정부의존도는 여타 일자리정책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여성일자리정책의 성패는 지역별 특성화 수준과 함께 정부부처와의 협력과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7기는 문재인정부의 여성일자리대책을 중심으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여성일자리 정책 혁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일자리사업이 정부부처의 사업에 지방예산을 더하는 매칭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충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일자리 정책 관련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안하는 여성일자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공시하는 여성일자리 목표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 임기 내 달성가능한 여성고용률, 지역특화 여성일자리창출사업,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확보 방안과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목표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여성일자리 목표공시제 도입은 자치단체의 여성일자리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줄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제 선정 과정 : 6.13.지방선거 민선7기 여성일자리 공약 제안 과제 중 선정
-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 미팅
 -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새로일하기본부
 - 현 여성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도출, 추진체계 재편과 민관거버넌스 과제 도출
- 부처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문
 - (사)사람과경제, 더나은세상을 위한 연구소
 - 충북형 여성특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제 도출

Ⅱ 정책과제

1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일자리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 충북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 여성일자리 민관 거버런스의 실질적 운영

2 충북형 여성특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여성가족부형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여성친화형 창업모델 발굴과 인증,자립화 지원
- 여성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

3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환경구축

- 여성집중 직종에서의 임금 현실화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확대

Ⅲ 세부 정책 과제

1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일자리 정책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

1) 현황

- 충북지역은 취업률, 고용률 등 양적지표는 양호한 반면, 소득수준,고용유지율, 휴가 사용률 등 고용의 질적 지표는 낮은 지역임
- 충북여성취업은 광역 민관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충북형 여성일자리 신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전국여성일자리 모범지역이었지만 2009년부터 중앙정부의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충북 여성일자리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분류, 오히려 위축(충북여성인턴제 예산 축소,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축소)됨

- 충북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8~2010, 3개년)은 지속되지 못하고, 여성일자리 사업은 개별화되어 추진

2) 문제점

- 민선 6기 공약중 ‘도지사 직속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2019.9.27.)’가 구성 되었지만, 회의단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가 필요함

○ 점점 더 커지는 시군별 여성고용률 격차

- 충북지역내 제조업 유치가 활발한 청주, 진천, 음성 지역 등의 고용지표와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지자체 고용지표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충북지역내 고용률 균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3) 개선과제

-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수립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
- 여성일자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다양성, 즉 계층별, 학력별, 가족의 형태와 관계에 따른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별화된 특수성과 일.생활 균형 관점,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들의 욕구라는 보편성에 기반하여 여성 일자리를 정책화해야 한다. 즉 여성정책 전반과 연동한 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

4) 정책요청 사항

○ 충북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전달체제 구축

- 중단된 충북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주체의 선정과 민관 거버런스에 기반한 종합대책수립 기업의 인력수급, 지자체 재정자립도, 개인과 가정의 경제력과 인구증가,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영역의 기초가 되는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수립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
 - 충북여성일자리정책에 대한 계획-추진-평가 총괄 담당(시군 포함) 부서
- 여성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일자리정책 전반에서 성인지적 조정을 책임 있게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자리정책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자리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각 자치단체별로 일자리조직 내부

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일자리정책을 검토하는 책임부서를 도입하고 아울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일자리예산수립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여성 일자리 민관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

• 민관 공동대표, 공동사무국 운영

여성일자리는 산업현장에서의 수요에만 기반하여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성차별이 일어나는 다양한 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내 여성단체, 여성일자리기관 등 민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현실개선과 성평등 의식확산, 여성친화적 상황개선 등 젠더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민관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일자리 정책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두 가지의 거버넌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여성일자리 거버넌스인 도지사직속 ‘여성고용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논의를 위한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 여성일자리 정책이 여성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여성의제과 결합하고, 여성정책과의 적극적 연계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성고용대책위원회’의 실제적 권한과 집행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공동대표제와 공동사무국 운영을 제안한다.

2 충북형 여성특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1) 현황

- 2017년 지역별 성평등수준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1년, 2012년 중하위지역에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중상위지역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다시 중하위지역으로 하락함.
- 사회적경제 기업은 여성이 60%이상 노동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경우 1인 1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적 기업도 고용부에 보고하는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1.2~1.5배 수준으로 보고 있음.

- 이에 여성의 일자리관련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여성이 주체가 되어 아래와 같은 우리 지역의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임.
- 여성친화 사회적 경제조직 개념 : 여성친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정의는 없으나,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적용하여 조직 운영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발전이 구현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사업내용,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기업 활동의 결과가 지역사회에 반영되거나 조직에 환원되는 체계, 그리고 기업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

2) 문제점

- 여성친화도시공간의 조성은 실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체감되어야 가능.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속에 실현되어야하는 여성 안전, 돌봄, 커뮤니티, 의사결정 등이 실제 구현화 될 수 있는 주체 조직이 없음
-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 조사 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가사 부담과 자녀 양육을 들고 있음. 가사, 양육 등 돌봄 서비스가 공적으로 확대되어야 안정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며 가족의 돌봄 역할이 개인 여성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음.
- 또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의 문제도 공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이를 해결할 조직이 필요함. 밤길안전문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여성리더십 육성 등 산재되어 있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미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좋은 일자리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까지 여성들의 무임금노동, 자원활동으로 기능하던 비영리 활동을 여성일자리로 순환시킬 필요가 있음.

3) 개선과제

- 여성이 처해있는 여성정책과제, 예를 들어 안전, 돌봄, 일 생활균형 사회조성 등 여성일자리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당면한 문제를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비즈니스 모델화
- 젠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수행 주체 발굴.- 교육, 의사결정과정, 지역 사회 순환체계 구축, 비즈니스 모델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개입과 지원

4) 정책요청 사항

○ 여성가족부형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여성친화형 창업모델 발굴과 인증, 자립화 지원

- 8개 군: 3년간 24개 발굴 육성(년간 1개 발굴 육성) /
- 3개 시: 3년간 24개 발굴 육성(년간 8개 발굴 육성)
-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별도의 아카데미 및 창업경진대회 등 추진
- 도시재생 및 안전한 마을만들기, 경찰청 및 여성 관련 사업 우선 위탁

○ 여성 사회적 경제 리더 양성

-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조직, 대학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시군 순회 여성 사회적경제 리더 과정 운영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 혁신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도단위 네트워크 운영

3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환경구축

1) 현황

- 최근 5년간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여성고용률은 54.2%로 증가 추세이나 2015년엔 57.9%로 OECD국가 중 31위에 불과하고, 남녀임금격차는 3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문제가 농축된 결과로 평가된다. OECD 국가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저임금비율, 남성과 달리 경험하는 경력단절, 남성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 15시간 단시간 근로, 중소기업 종사 비율과 여성 집중 직종 산업에서의 낮은 처우,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대가, 경력단절로 인한 기업 내 고위 관리직의 승진 차단 등의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일자리의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충청북도 성별 임금(2014-2017)

단위 : 만원, 원, %, %p)

		연도				증감		
		2014	2015	2016	2017	2017-2014	2017-2015	2017-2016
월 평균 임금	남성	223.0	253.4	259.5	271.7	17.9	6.7	4.5
	여성	127.0	159.1	165.0	170.7	25.6	6.8	3.4
시간당 임금	남성	12,680	13,807	14,020	14,361	11.7	3.9	2.4
	여성	8,524	9,459	9,907	9,944	14.3	4.9	0.4
성별 격차	월 평균	43.1	37.2	36.4	37.2	-5.9	0.0	0.7
	시간당	32.8	31.5	29.3	30.8	-2.0	-0.7	1.4

- 충청북도 소재 사업체 종사 여성임금노동자의 2017년 월평균 임금은 170.7만원, 시간당 임금은 9,944원으로 2014년 대비 25.6%, 14.3% 상승하였다. 2017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월 평균은 37.2%, 시간당 격차는 30.8%이다. 2014년 대비 2017년 성별 임금 격차는 월 평균은 5.9%p, 시간당은 2%p 축소되었다

충청북도 성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2014-2017)

(단위 : 천명, %, %p)

		연도				증감		
		2014	2015	2016	2017	2017-2014	2017-2015	2017-2016
남성	전체 노동자	319	316	327	336	5.1	6.0	2.7
	최저임금미만	24	20	27	28	14.3	28.6	3.6
	최저임금미만비율(A)	7.5	6.3	8.4	8.4	0.9	2.1	0.0
여성	전체 노동자	241	214	255	268	10.1	20.1	4.9
	최저임금미만	49	38	55	58	9.0	20.0	3.0
	최저임금미만비율(B)	20.4	17.9	21.4	21.7	1.2	3.7	0.3
성별격차		12.9	11.6	13.0	13.2	0.3	1.6	0.2
최저임금 미만 중 여성 비율		67.1	65.5	67.1	67.4	0.3	1.9	0.4

- 충청북도 소재 사업체 종사 여성임금노동자의 2017년 최저임금 미만 종사 비율은 21.7%로 여성이 남성 보다 13.2%p 높다. 여성의 2014년 대비 2017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1.2%p 상승하였다. 충청북도 소재 사업체 종사 최저임금 미만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7.4%로 2014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충청북도 여성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5014-2017년 기간 내내 20%를 상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 2008년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17년 2,802개(중소기업 1,596개)인증) 인증 의무 대상 공공기관 97.7%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밀착형·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도하고 있다. 자치단체 역시 산하 공기업의 인증을 유도하고 지역내 모든 기업들이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별도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99%인 충북의 특성상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현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비율이 전국57%, 충북은 79%임.

2) 문제점

-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의 규제원리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별 체제로 인해 직종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조건에서는 각각의 직무에 적합한 보편적 임금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직무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성과임금제나 개인별 연봉제가 확대되어 임금불평등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헌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조항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능한 여성

3) 개선과제

-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지표를 관리하는 제도적 마련이 선행
 - 남녀고용 격차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고용활성화 사업 가운데, NCS직종 개발과 훈련체계,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 확대에 기여하도록 일자리 진입 단계에서 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 여성이 주로 일하는 기업인 노동자 10인이하 기업과 영세 소기업의 여성 고용을 지원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경력단절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여성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으로 우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변화

4) 정책요청 사항

- **여성집중 직종에서의 임금 현실화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일자리정책에 있어서의 관점 변화 :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사실 중산층 이상 가족에서 가능한 것이었지만(계층화된 규범), 사회 전반에서 지배력을 갖는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런 규범적 지배력 하에서 여성들은 생계보조자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1.5인 소득자 가족 모델’은 ‘동등한 성인 소득자 모델’로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
 - 성별임금격차 지표관리
 -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확대

- 가족친화기업 인증 컨설턴트 육성
- 가족친화기업 인증 컨설팅 지원

김현주 사단법인 충북체육포럼 사무국장

I 정책안 도출 과정 설명

1 참여주체

- (사)충북체육포럼 회장단 및 이사 44명
- (사)충북체육포럼 민·관 합동 정책포럼 TFTeam

2 논의 과정

- (사)충북체육포럼은 2013년 창립이후 지역 스포츠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과제, 삶의 질과 체육의 역할과 관련된 초청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정책제안서를 2회에 걸쳐 발행하였음
- (사)충북체육포럼은 공공체육정책 및 스포츠산업, 전문(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특수(장애인)체육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민·관 합동 정책포럼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체육정책을 정책워크숍에서 제안하고 토론했음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책포럼 TFTeam 구성
- 1차적으로 생산된 체육 정책제안 주제 중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본 포럼의 이사들과 TFTeam의 토론을 거쳐 수정(2차 정책워크숍)
- TFTeam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인 체육정책제안서가 작성되었음

II

정책과제명

충북스포츠역사관 건립

1) 현황

- 충북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무후무한 7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을 만큼 대한민국의 스포츠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사의 한 축을 장식해 왔으며, 신궁으로 불린 김수녕,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이운재를 비롯하여 여러 종목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스포츠 영웅을 탄생시키는 등 과거부터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음
- 충북 체육인들의 꿈과 헌신을 담은 감동의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체육인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시키고, 스포츠경기에서의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감동,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후세들에게 계승해야 함
- 충북 체육의 역사, 발전 과정을 미래 세대들에게 보존 계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관련 유물 및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전시 노력 부족한 실정
- 연구용역을 통해 60년간의 발자취와 선배체육인들의 업적을 기록했으나 전문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학교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전 분야에 걸친 유물 및 역사 관리·보존·전시가 필요한 실정
-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들에게 충청북도의 체육계가 만들어 온 발자취를 제공하여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 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충북 스포츠의 또 다른 르네상스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전국 체육역사관(박물관) 현황

구 분	시 설 명	주 요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박물관 (2020년 준공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 구성 : 1관(만남과 기억), 2관(도전과 환희), 3관(영웅과 눈물), 4관(우리가 만드는 체육의 미래) ○ 주요시설 : 전시, 수장, 교육연구, 사무, 편의 공용시설 ○ 기타 : 지상3층/지하2층, 사업비 235억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 위치 : 태릉빙상장 내 ◦ 구성 : 1관(역사관), 2관(올림픽관), 3관(전국체전관), 4관(경기단체관)
지역 체육 역사 관	부산	국제대회기념 전시관	◦ 위치: 부산체육회관 1층 ◦ 구성: 제1전시실(월드컵실), 제2전시실(아시안게 임실1), 제3전시관(아시안게임실2), 제4전 시관(아/태장애인경기실), 제5전시실(기획 전시실)
	전남	역사관	◦ 위치: 전남체육회관 1층 ◦ 구성: 역사기록, 체육인 유품 및 메달, 유니폼 등 전시
	서울	홍보관	◦ 위치: 1층 로비 ◦ 구성: 메달리스트 전시
	경상북도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특별전시관	◦ 김천실내체육관 ◦ 구성 : 전국체전 기념관, 경북체육역사관, 도.시정 홍보관, 4D입체영상관
종목별 역사관		한국 사격 역사관	◦ 위치 : 경남 창원종합사격경기장(2012년)
		롯데 자이언트 박물관(야구)	◦ 위치 : 부산 사직야구장
		한국스키박물관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축구박물관	◦ 위치 :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대전시티즌 뮤지엄(축구)	◦ 위치 : 대전월드컵경기장
		풋볼 팬타지움(축구)	◦ 위치 :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2018년) ◦ 구성 : 전시, 놀이, 체험, 스포츠게임, 스포츠 용품점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전시, 수장, 교육연구, 사무,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박물관 준공예정
- 지역 체육역사관의 경우 건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 · 보존의 부재, 전시 공간의 부재로 소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단순히 전시기능을 벗어나지 못하여 활성화 및 운영에 문제점 노출
- 따라서 스포츠역사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스포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 전시시설 뿐만 아니라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됨

2) 문제점

- 미래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스포츠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을 전수하려는 대중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칫 충북 스포츠의 역사적 유산이 세월의 흐름 속에 기록이 유실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전 분야에 걸친 유물 및 역사 기록 · 보존 노력 부족
- 충북 체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인 스포츠역사관의 부재
- 체육관련 유물 및 기록의 체계적인 전시·관리 및 체육의 가치를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 필요

3) 개선과제

- 충북 스포츠의 역사적 유산을 후세에게 계승하고, 체육인들의 자부심 고취 시키며, 지역 주민의 교육 및 여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스포츠역사관 건립
-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시, 체험, 교육, 휴식이 가능한 체험형 복합문화 공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함

4) 정책요청 사항

- 충북스포츠역사 보존 전문 연구부서 설치 : 단순 체육 유물 수집이 아닌 과거 및 현재의 체계적인 스포츠 기록 및 보관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부서
- 충북스포츠역사관 신축 :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 조성
 - 연구 공간 : 체계적인 스포츠 기록 및 보관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부서실, 기록물의 데이터화, 데이터 분석
 - 전시 공간 : 스포츠역사관 고유의 기능
 - 제 1관: 전통 스포츠관(광복이전 역사물 전시)
 - 제 2관: 국제대회 스포츠관(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대회 등)
 - 제 3관: 전국대회 스포츠관(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 제 4관: 생활스포츠관(도민체전, 도생활체전, 소년체전 등)
 - 제 5관: 디지털 전시관(각종 자료들의 디지털화-터치스크린, 영상전시물 관람)
 - 체험 공간 : 단순한 전시기능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활성화 시키고, 방문자 수를 확대하여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규모의 첨단 체험 시설 구축

- 유아 스포츠 체험 놀이터
- 스포츠 게임존 : 패털티킥 게임, 양궁, 사격, 야구 등
- VR 스포츠 게임존 : 야구, 축구, 골프, 탁구, 복싱, 테니스, 배드민턴, 양궁 등
- 어드벤처 존 : 클라이밍, 점프 체험, 장애물 코스 체험, 슬라이드 등
- 스포츠 포토존 : VR 유니폼 포토, 스포츠스타 홀로그램, 스포츠스타 피규어, 트로피 샷 등
- 교육 공간 : 전시 자체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위한 교육 공간(체육전문가 교육, 일반인을 위한 건강교육, 노인 건강 교실,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각종 운동프로그램 교실 개최 가능한 체육시설)
- 문화 복합 공간 : 전시관은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장소로 변화
 - 도민 편의 · 휴게시설 : 카페, 레스토랑, 공원, 산책로, 스포츠용품 판매 시설 등
 - 회의실 : 각종 세미나 유치가 가능한 회의 공간
- 수장고
- 사무 공간

허정무 충북평생교육포럼 대표

I 정책안 도출 과정

1 참여주체

- 충북의 평생교육인들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사회중심 평생교육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음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정책 전달체계의 다변화에 따라 정책 효율성이 약화되는 등 당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충북》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로서 “충북평생교육포럼”을 창립하여 민관합동정책포럼에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향후 “충북평생교육포럼”은 평생학습정책 네트워크로서 도민들의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정책 수요를 찾아내고 새로운 평생학습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충북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충북평생교육포럼”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의 소통 창구이자 평생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 청년실업, 베이비부모 세대의 은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평생교육의 가치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함
-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개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평생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한 평생교육 전문가 그룹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충북민관합동정책포럼에 동참하여 충북평생교육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충북평생교육포럼은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민간기관 전문가,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공무원, 충청북도 공무원 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갈 것임

2 논의 과정

- 2014.11. “충북평생교육연구회” 구성(충북평생교육진흥원 설치, 3개 분과, 30명)
- 연구과제 추진
 - 평생교육을 통한 충북 행복온도 올리기(2016)
 - 충북 평생학습도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6)
 - 충북의 평생교육을 활용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2017)
 - 충북도민 행복교육 프로그램 개발(2017)
 - 충북지역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 연계 방안 연구(2017)
 - 충북 평생교육관계자의 다문화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 방안 연구(2017)
 - 충북 평생교육사 직무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2017)
- 2018.02.22. “충북평생교육포럼” 창립, 충북평생교육포럼 규약 제정
- 4개 분과(자유주제분과, 고용능력분과, 성인문해분과, 빅데이터분과) 운영
- 사무국은 충북평생교육연구원에서 지원
- 2018.03.29. 1차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민관합동 정책포럼 참여 결정
- 2018.04.12. 충북민관합동정책포럼 참석
- 2018.05.10. 2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제안과제 결정(2개 과제) 유관기관으로서 충북평생교육관계자 4명 참석으로 공동 협의
- 2018.06. 전체 회원 및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에게 이메일 전송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확정(충북도 주관부서 관계자와 협의)

Ⅱ 정책 과제 명

1 모든 세대가 더불어 성장하는 충북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1) 추진배경

○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생 재설계의 필요성 대두

-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충북지역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인구의 17.0%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음
-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개발하고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습득의 방안으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 평생직장의 의미 퇴색으로 인한 변화

-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평생학습 필요성 증가
 - 평생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직업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직 및 전직의 증가는 새로운 직장 및 직업에 대한 준비를 위한 방안으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직업관련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요구 강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역동성 저하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퇴직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직업교육과 관련한 평생학습의 요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 일-여가-복지-학습의 연계 강화

- 생애단계별 여가 시간의 확대
 - 생애 제1 전환기 이후 학습시간 및 노동시간은 낮아지는 반면에, 여가시간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여가와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학습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도민의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사업 구성 필요

- 충북의 정책적, 지리적 여건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11개 시·군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각 시·군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일자리 관련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 필요
 - 2017년 도민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 ‘문화예술교육 (25.4%)’ 다음으로 ‘직업능력교육 (24.9%)’, ‘인문교양교육 (22.7%)’ 분야의 프로그램 개설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관련 법령 및 국가정책 동향

평생교육법 제1장 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장 11조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 강좌 확대
 - 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18~’22) 수립
 - 전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온라인·산업맞춤형 평생교육, 지역단위 평생 학습역량 강화
-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일·학습을 병행하는 재직자·성인학습자 특성을 감안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도입·적용을 지원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2개교 내외 113억원 지원
 - 융합전공제, 온라인교육,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확대 운영
 - 성인 및 재직자 재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과목 등에 대한 시간등록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문대학, 지역 수요 반영한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제공
-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 (지원조건)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
 - * 연간 최대 35만원 수준으로 5,000명 내외 지원
 - (지원방식) 바우처 신청→대상자 선정→전자바우처 발급→희망 강좌 수강
 - (활용분야) 저소득층 대상 각 지자체·대학 평생교육 강좌, 한국형 나노디그리 이수 비용 등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 [산업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 촉발
- [인구구조] 고령화, 성인인구 증가로 평생학습 수요 증가
- [사회구조] 소득 양극화 심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 확산
- [교육혁신] IT 활용 교수·학습 혁신, 학습 형태의 변화
- [평생교육] 실제 참여 시간 부족, 계층간 참여 격차 확대
- (Prosperity) 개인과 사회의 동반 번영 지원
 - 과거에는 평생교육을 여가선용, 노후 생활 및 복지 관점에서 접근
 - 미래에는 개인의 사회변화 대응, 역량 개발 수단으로 평생학습을 활용하여 양질의 인적자원 축적,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 (Partnership) 기관 및 제도 간 연계 협력 강화
 - 평생교육기관별 독립적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제도간 장벽 제거
 - 미래 중앙-지방 간, 지자체 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 학습결과(학위, 학점)-자격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

○ 성인문해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2호 생략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생활문해 및 정보문해 포함)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9조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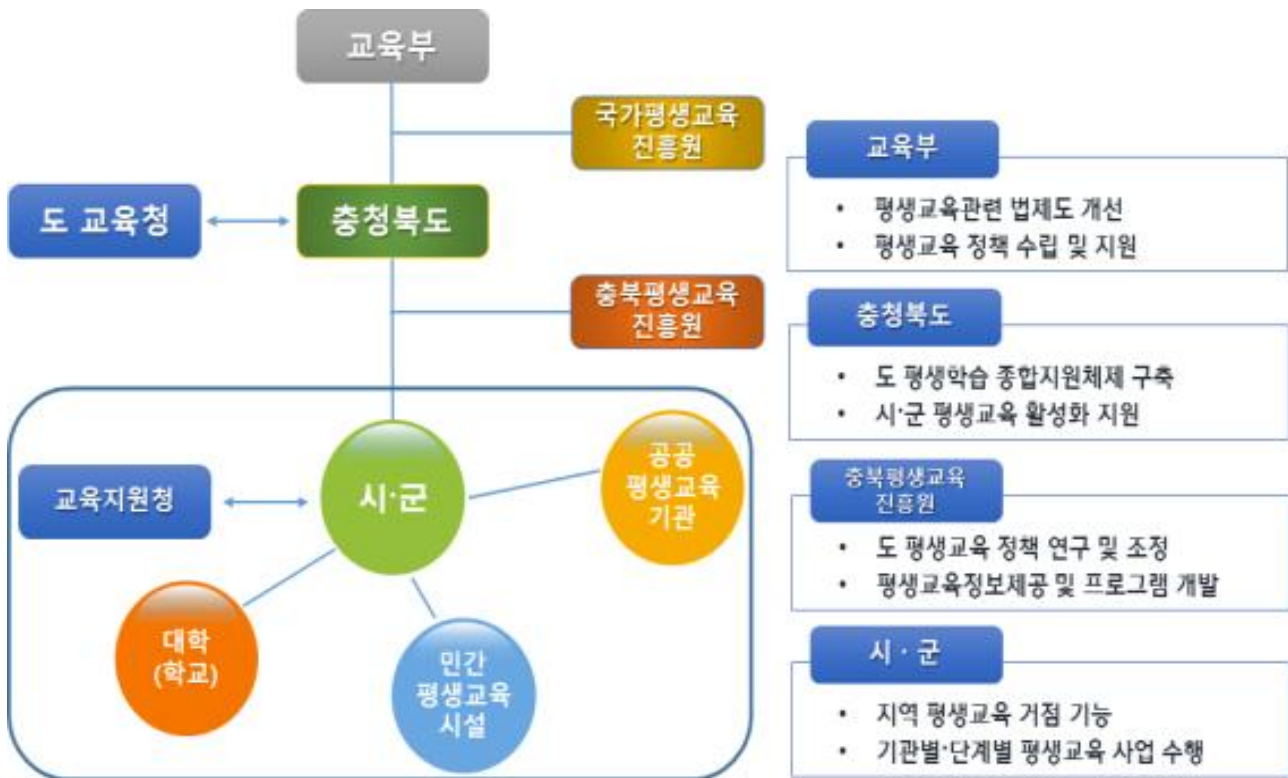
-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계획

-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체계별 역할 및 기능



추진체계 기능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11개 시군	시·군 평생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수립 평생교육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지역평생교육 진흥원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평생교육 공모 사업 및 지원 관계자연수및 평생교육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도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평생교육총괄조정및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평생교육진흥시책 기획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정보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평생교육기관 연계 구축 및 정보 제공 지역평생교육운영실태조사등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 역할 >

1.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광역수준에서의 지역 평생교육 추진 및 진흥본부
2. 광역단위 평생학습의 총 본산이자 사령탑으로서의 헤드 쿼터
3. 광역단위 평생학습 계획·실행·평가의 중심체
4. 광역단위 평생학습 “관-민-산-학-군”네트워크 구심체
5. 평생학습 특화 프로젝트 추진 본부의 기능

<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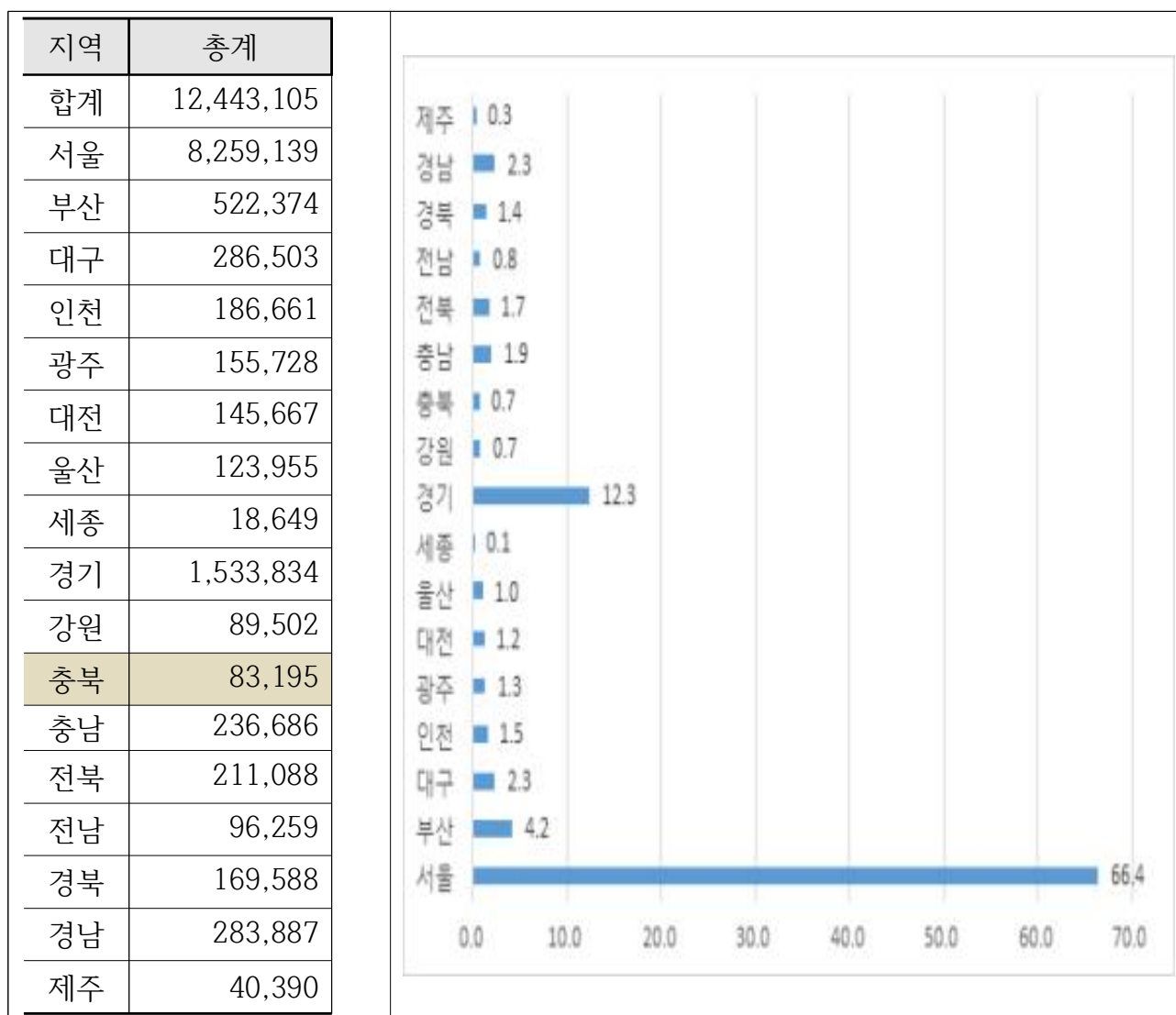
3) 현황과 문제점

○ 평생교육 학생·학습자 총괄

- 2017년 말 기준 충북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는 83,195명으로 전국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시·도별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현황

(단위 :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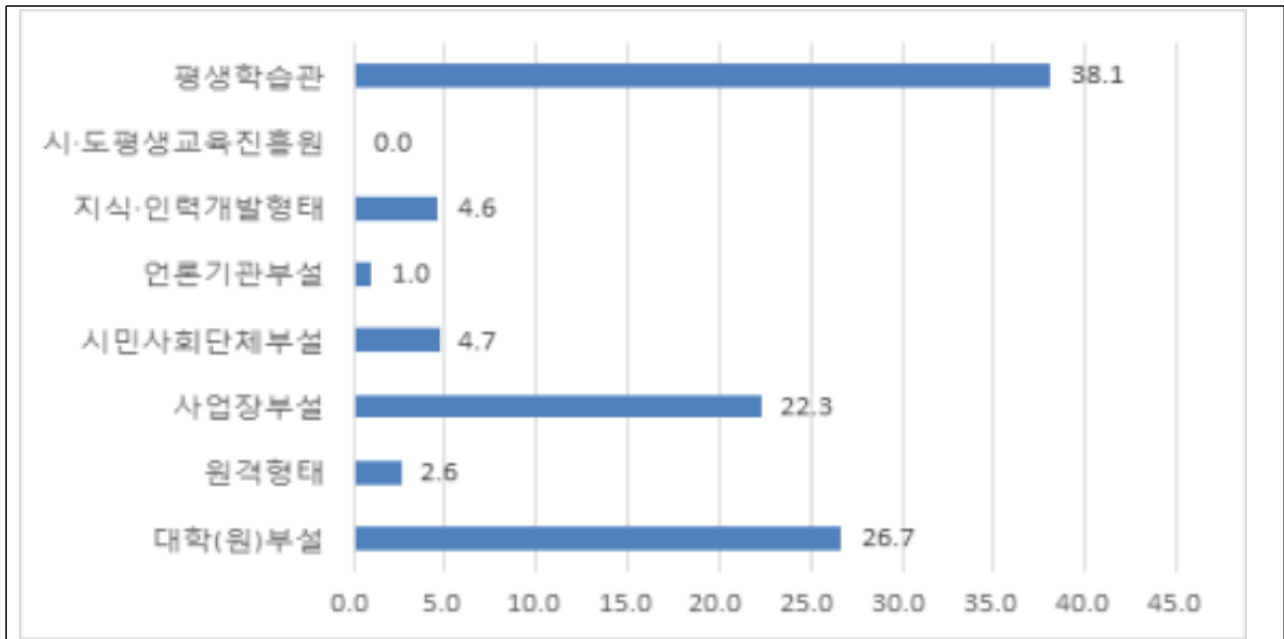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 2017년 충북지역의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922명임
 - 평생학습관 38.1% > 대학 부설 26.7% > 사업장 부설 22.3 >

(단위 : %)



충북지역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 2017년 충북지역의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73명임
 - 특수대학원 64.1% > 기능대학 15.6% > 각종학교 5.9%

충북지역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학생·학습자

구 분	인 원	비중
각종학교(초·중·고)	623	7.5
방송통신고등학교	472	5.7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고등)	274	3.3
산업대학	3	0.0
각종학교(대학과정)	263	3.2
기능대학	1,320	16.0
특수대학원	5,318	64.3
합 계	8,273	100

※ ()는 총계에 포함되지 않음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충북도민은 평생학습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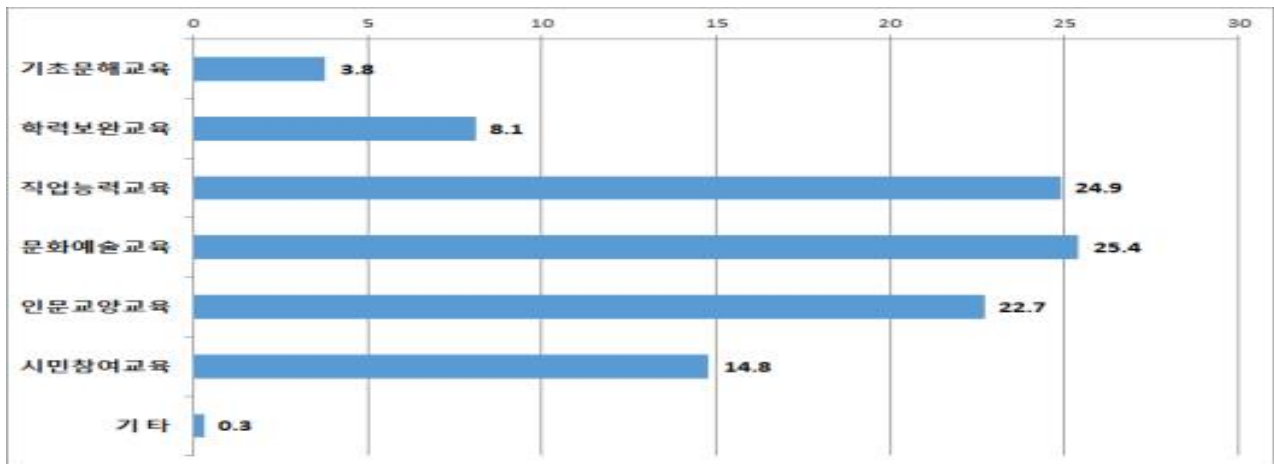
평생학습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권역별)

구분		통계값		
		2017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권역	충청북도	2,370	1.7232	.55830
	청주시	667	1.7076	.55072
	북부권	601	1.7238	.57757
	중부권	701	1.6591	.55999
	남부권	401	1.8603	.51522
평생교육	평생	2,071	1.7170	.56560
	비평생	299	1.7659	.50372

※ 4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중요한 편이다 4.매우 중요하다)

※ 자료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충북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도민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희망영역은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교육 순으로 나타남



평생학습 참여 희망분야

※ 자료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충북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조례 및 협의회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
 -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시·도 차원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음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도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2011. 2. 11)
-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2011. 2. 25)

○ 도 추진기반

- 충북도청에서는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협력팀(총정원 4, 담당자 1)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관련 정책 추진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지정형태로 현재 충북연구원에 지정(2017. 04.20)되어 충북 평생교육의 총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군 추진기반

- 충청북도에는 현재 8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도내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청주시(2004), 제천시(2005), 단양군(2005), 진천군(2006)

음성군·옥천군(2013), 증평군(2014), 충주시(2015)

- 충북지역 내 평생학습도시의 관련조직을 살펴보면 충주시와 음성군은 ‘과 체제’, 청주시와 진천군 및 옥천군의 경우 ‘사업소 체제’, 제천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은 ‘팀 체제’, 보은군과 괴산군은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음
- 특히, 충주시의 경우 2015년 4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 중임
- 영동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2016년부터 교육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있음

시·군 평생교육조직 현황

구 분		시·군	전담조직	조례	위원회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 학습도시	과/사업소 체제	청주시	평생학습관	○	○	○	2명
		충주시	평생학습과	○	○	○	2명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	○	○	2명
		옥천군	평생학습원	○	○	○	1명
		음성군	평생학습과	○	○	×	1명
	팀체제	제천시	평생학습팀	○	○	○	1명
		단양군	평생학습팀	○	○	○	1명
		증평군	평생학습팀	○	○	○	1명
비평생 학습도시	팀체제	영동군	평생학습팀	○	○	×	1명
	조직없음	보은군	×	○	×	×	-
		괴산군	×	○	×	×	-

○ 도내 대학 추진기반

- 도내 18개 대학 중 15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일반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2016년 현재 131개로 2015년 대비 7개 기관이 감소함
 - 2016년 충북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96개로 2015년 대비 3개 기관이 감소하였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개 기관이 폐업을 하였고 9개 기관이 신규로 등록되었음
 - 특히,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이 9개소가 폐업을 하였음
 -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35개로 2015년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하였음
- 학습자의 경우 2016년 현재 103,680명으로 2015년 대비 75,49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지식·인력개발형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충북 학습자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직업능력을 포함한 생애능력 개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제고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강화
 - 직업기초능력 등을 포함한 생애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개설 필요

○ 추진기반 분석 및 시사점

- 충북지역의 평생학습도시는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으로 72.7%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4개(청주, 제천, 진천, 단양)의 평생학습도시에서 2013년 2개 시·군(옥천, 음성), 2014년 1개 시·군(증평), 2015년 1개 시·군(충주)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음
-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평생학습 전담조직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음
 - 8개의 평생학습도시 중 충주시와 음성군은 ‘과 체제’, 청주시, 진천군, 옥천군은 ‘사업소 체제’, 나머지 3개 시·군은 ‘팀 체제’의 평생학습 전담조직임
 - 비평생학습도시 중 영동군은 유일하게 평생학습 전담조직이 있으며,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음
- 향후 충북지역 비평생학습도시(보은, 괴산, 영동)의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영동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주민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추진하였음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3개 시·군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컨설팅이 요구됨

2

제안과제

- (과제1) 중장년층의 생애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학교』 운영
- (과제2) 고령층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문해교육 및 정보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충북문해교육센터』 운영)

Ⅲ

세부 정책 과제

1

중장년층의 생애설계를 위한『인생이모작학교』운영

1) 정책 추진 배경

-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생애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경력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재도전과 지속가능한 직업과 삶으로의 전환 도모
- 생의 전환기에 있는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코칭스쿨을 통한 자신감 고취
- 이·전직 희망대상 커리어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으로 생애경력 설계 기회 제공
- 도내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발굴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제공
-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형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2)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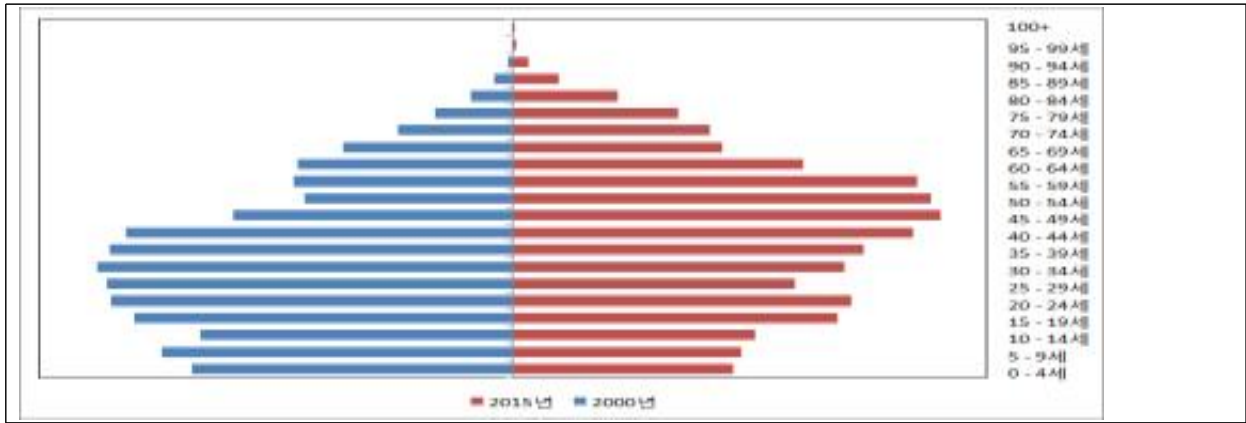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평생학습 수요 증대
 - 2016년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5.12%(240,690명)임

충북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

(단위 : 명, %)

	전 국		충 북		
	2011년	2016년	2011년	2017년	
				주민등록인구	비중
계	50,734,284	51,696,216	1,562,903	1,591,625	100
0 - 4세	2,328,435	2,204,271	73,312	68,043	4.28
5 - 9세	2,347,414	2,361,897	73,734	73,502	4.62
10 - 14세	3,134,531	2,349,979	99,601	72,974	4.58
15 - 19세	3,546,594	3,131,059	110,396	98,821	6.21
20 - 24세	3,212,315	3,541,061	95,878	107,711	6.77
25 - 29세	3,515,101	3,217,367	101,644	90,423	5.68
30 - 34세	4,024,454	3,517,868	111,711	100,107	6.29
35 - 39세	4,230,332	4,016,272	121,816	112,483	7.07
40 - 44세	4,617,122	4,212,243	136,533	122,308	7.68
45 - 49세	4,229,561	4,584,810	126,159	137,329	8.63
50 - 54세	4,313,633	4,182,392	133,556	128,372	8.07
55 - 59세	3,214,513	4,242,269	100,495	136,462	8.57
60 - 64세	2,319,307	3,139,076	68,595	102,400	6.43
65 - 69세	1,897,565	2,237,345	63,659	67,836	4.26
70 - 74세	1,640,831	1,781,229	60,858	60,318	3.79
75 - 79세	1,130,345	1,457,890	45,665	53,799	3.38
80 - 84세	618,481	909,130	23,760	36,293	2.28
85 - 89세	283,425	416,164	10,790	15,595	0.98
90 - 94세	95,014	141,488	3,558	5,161	0.32
95 - 99세	23,677	34,844	895	1,217	0.08
100세 이상	11,634	17,562	288	471	0.03
65세 이상 인구	5,700,972	6,995,652	209,473	240,690	15.12

※ 자료 : 통계청, KOSIS



충청북도 인구구조

※ 자료 : 통계청, KOSIS

-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령인구비율이 20%가 넘는 곳이 11개 시·군 중 5곳에 달함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

※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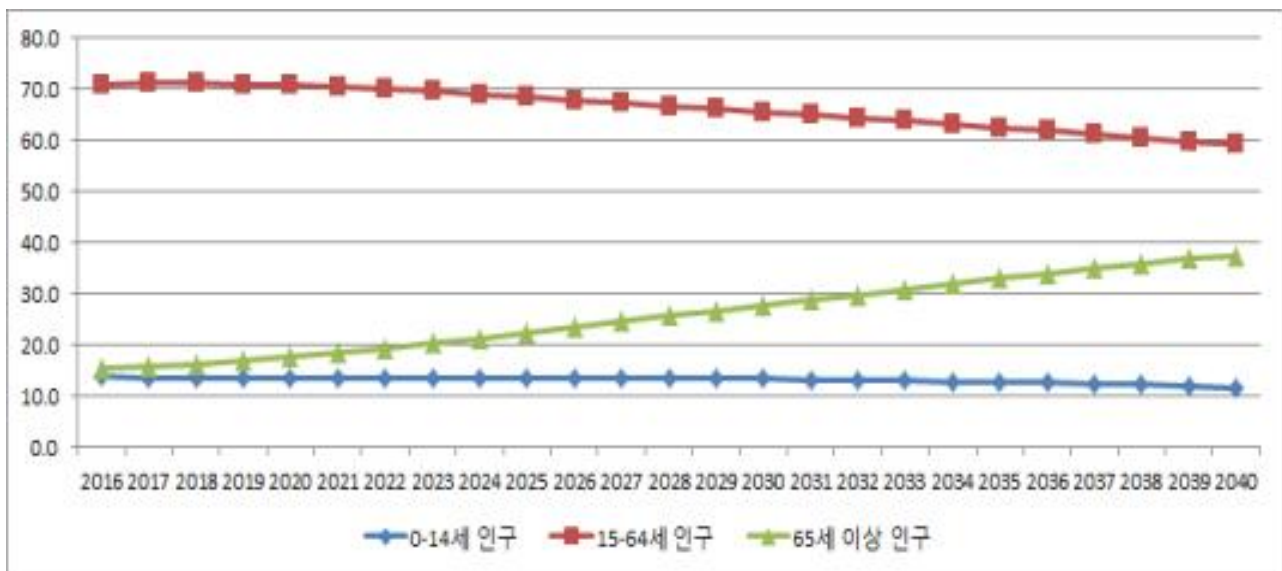
- 충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인구 전망

(단위 : %)

구 분	2016년		2040년		증 감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총 인 구	1,566,690	100.0	1,699,664	100.0	
생산가능인구(15~64세)	1,113,358	71.1	927,830	59.2	11.8%p ↓
유소년인구(0~14세)	214,258	13.7	183,877	11.7	1.9%p ↓
고령인구(65세이상)	239,074	15.3	587,957	37.5	22.3%p ↑

※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충청북도 인구전망

※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3) 정책 개요

- 이·전직 예정자를 위한 찾아가는 커리어개발 코칭 프로그램 운영
- 직업 분야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상 모집을 통한 맞춤형 기본교육 추진
-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제공하여 인생후반부의 계획수립 및 경력관리 활동 지원

-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직 퇴직자들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가로 양성
 - 은퇴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수요처 발굴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 은퇴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활동 전개
- 은퇴자와 도내 교육수요처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
- 직업분야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상 모집을 통한 맞춤형 기본교육 추진
- 생애경력설계 기회 제공으로 인생후반부의 계획수립 및 경력관리 활동 지원
-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외계층(장애인, 노년층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상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층이 인생이모작학교에서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생애설계 상담	생애설계 7대 영역(일, 사회공헌, 가족, 건강, 재무, 관계, 여가)을 주제로 중장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1:1 맞춤형 생애설계상담을 진행
중장년층 상담교육	상담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성향을 파악하고,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인생후반기 준비를 지원
직장인 미래설계 아카데미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인생후반전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자기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중장년층 세무/재무과정	내실있는 세무/재무교육을 통해 건전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기초 세무/재무교육 실시
스마트브랜드 구축 과정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스토리로 나타내기 위한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 이야기를 디지털화 시키는 능력을 배양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교실	생애설계 각 영역별 강의 또는 상담 전문가가 상담을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제2 인생설계를 지원
사회공헌 행복창조 아카데미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안내

4) 정책요청 사항

- 노후준비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가 노후준비 주체로 본인스스로를 지목하고 있음
 -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가입율이 낮아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 고소득층의 경우 노후준비기간이 길고 노후준비에 사용하는 금액도 많음
- 획일적인 제도가 아닌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에 효과적인 노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소득수준별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는 1차 베이비붐 세대, 그 중에서도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함
- 개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노후준비가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고령층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문해교육 및 정보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충북문해교육센터』운영)

1) 정책 추진 배경

- 한국사회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성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립국어원(2008)에 따르면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인구는 약 2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문해능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애기초 능력임
- 따라서 비문해자들을 위한 성인기초 및 문해교육지원, 학력보완 교육, 정보격차 해소 등 생활밀착형 맞춤형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적 차원 및 소외계층의 교육기회제공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함

2) 현황과 문제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약 13.1%)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충북은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성인문해교육 잠재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문해인구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

시·도별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20세 이상)	합 계 (잠재수요자)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서울	7,850,612	681,614 (8.7%)	173,434 (2.2%)	508,180 (6.5%)
부산	2,792,377	354,288 (12.7%)	95,984 (3.4%)	258,304 (9.3%)
대구	1,943,199	249,968 (12.9%)	68,600 (3.5%)	181,368 (9.3%)
인천	2,235,462	237,278 (10.6%)	66,991 (3.0%)	170,287 (7.6%)
광주	1,139,935	118,198 (10.4%)	36,041 (3.2%)	82,157 (7.2%)
대전	1,184,074	128,317 (10.8%)	34,887 (2.9%)	93,430 (7.9%)
울산	884,359	86,349 (9.8%)	24,639 (2.8%)	61,710 (7.0%)
경기	9,360,325	911,797 (9.7%)	271,174 (2.9%)	640,623 (6.8%)
강원	1,206,863	243,246 (20.2%)	82,729 (6.9%)	160,517 (13.3%)
충북	1,223,604	225,613 (18.4%)	72,923 (6.0%)	152,690 (12.5%)
충남	1,605,880	333,196 (20.7%)	111,422 (6.9%)	221,774 (13.8%)
전북	1,433,909	293,899 (20.5%)	110,826 (7.7%)	183,073 (12.8%)
전남	1,414,445	375,221 (26.5%)	146,885 (10.4%)	228,336 (16.1%)
경북	2,120,411	447,598 (21.1%)	156,468 (7.4%)	291,130 (13.7%)
경남	2,554,048	399,594 (15.6%)	145,976 (5.7%)	253,618 (9.9%)
제주	453,548	67,053 (14.8%)	26,406 (5.8%)	40,647 (9.0%)
세종	148,570	19,367 (13.0%)	5,918 (4.0%)	13,449 (9.1%)
합계	39,551,621	5,172,596 (13.1%)	1,631,303 (4.1%)	3,541,293 (9.0%)

※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초등학교 중퇴+미취학 / 중학교 잠재수요자: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충북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초 자치단체	전체인구 (20세 이상)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합 계 (잠재수요자 비율,%)	
소 계	1,223,604	72,923	52,690	25,613	18.4%
청주시	31,101	23,519	55,651	79,170	12.5%
충주시	165,513	10,576	23,708	34,284	20.7%
제천시	108,287	7,543	16,349	23,892	22.1%
보은군	27,528	3,826	6,677	10,503	38.2%
옥천군	41,606	5,153	7,626	12,779	30.7%
영동군	41,022	4,113	8,356	12,469	30.4%
진천군	51,224	3,623	7,441	11,064	21.6%
괴산군	31,724	4,026	7,094	11,120	35.1%
음성군	73,639	5,820	11,251	17,071	23.2%
단양군	24,420	2,872	5,063	7,935	32.5%
증평군	27,540	1,852	3,474	5,326	19.3%

※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충북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 충북의 39개 문해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제천시 8개, 청주시 6개, 충주시 · 진천군 · 증평군 4개 등의 순이며, 권역별 분포는 중부권 16개(청주시

포함), 북부권 14개 등으로 개설되어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문해교육기관 분포수준이 높음

- 충북의 11개 시·군 중 평생학습도시에 35개 기관이 분포하고 있어서 비평생학습도시에서의 문해교육을 받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실정임
- 문해교육은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교육 29개 기관, 장애인 교육 9개 기관, 결혼이민자·주부 교육 6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음
- 최근 농촌 인구 감소 및 3D업종 기피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결혼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 충북의 39개 문해교육 운영기관 중 29개 기관이 교육부 교재, 13개 기관이 자체개발 교재, 3개 기관이 학교정규 교과서 등을 교재로 사용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국립국어원,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타기관 교재를 사용하고 있음
- 문해교육 교사는 총 263명으로 학력인정자격을 보유한 교사는 46명, 민간자격을 보유한 교사는 83명이 활동하고 있음
 - 학력인정자격을 갖춘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진천이고, 민간자격을 갖춘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천임
 - 한편, 옥천, 영동에는 총 24명의 문해교사가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력인정자격이나 민간자격을 갖춘 교사는 전무함
- 문해교육 운영기관에는 총 18명의 평생교육사가 존재하고, 이들 모두 2급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등에 편중되어 있음
- 2017년 기준 39개 문해교육 운영기관 중 37개 기관이 보유한 총 교실은 134개이고, 평균 1개 기관당 3.6개의 교실을 보유하고 있음. 컴퓨터교실은 25개이고, 기관당 0.7개의 시설을 갖추고 컴퓨터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보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문해교육 담당자의 35.9%만이 연평균 1~2회의 문해교육 관련 연수 및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있지만, 51.3%는 교육 참여기회가 없었거나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임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관심, 능력있는 강사 확보, 직원의 전문성, 자체 교육공간 확보, 교육 기자재, 교재 확보 등도 미흡한 실정 이지만, 도민의 관심, 업무인력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는 보통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해교육 사업을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87.2%, 사업 네트워크 82.1%, 정보 네트워크 77.0%, 시설 네트워크 76.9% 등 4개 영역 모두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문해교육 사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시설 및 단체 간 연계·협력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협력할 시간과 기회가 부족,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시대에서 노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3) 정책 개요

- 성인문해교육(생활문해 및 정보문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광역문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시·군의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고령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와 정보화사회 대응역량 강화(디지털문해 해소)
-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
-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 지원(전자기기, 스마트폰 사용법 등)
- 비문해 고령층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적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4) 정책요청 사항

- 지역분산을 고려한 문해교육기관의 개설 확대
 - 문해교육은 도심보다는 비도심에서 더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됨에 따라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문해교육기관이 분산·확대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요구됨
- 교육대상의 다양화
 - 외국인근로자, 성인비문해자 등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대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재 개발 지원 및 적절한 평가체계 구축
 -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부차원의 표준화된 교재 개발·배포가 필요함

- 학습자 상담, 시험, 시화전, 강사간담회 등 문해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관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문해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 제공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해교육 시설의 확충 및 최적화
 -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컴퓨터교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이며, 미래의 정보문해교육을 위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칠판, 빔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실 수에 대비하여 기자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교육환경 개선이 요구됨
- 교육담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운영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문해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담당자의 59.0%가 응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교육 및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문해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문해자들에게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교육참여기회 제공
- 문해교육 사업을 위한 시·군 네트워크 구축
 - 문해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충북문해교육센터』 설치·운영)
 - 충북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해교육 운영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충북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전문적 내용 지원, 관계기관 담당자 연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문해교육기관의 역량이 강화되고, 충북 문해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